國政指標
新韓國창조
깨끗한政府
튼튼한經濟
건강한社会
통일된祖國

국정신문

1995년 2월6일
월요일
週刊
비매품

광복 50

發行人 吳隣煥 · 編輯人 李敬在 · 發行處 公報處 政府刊行物製作所 / 우편번호 110-021 서울 鍾路區 付岩洞 182-1 / 전화(02) 391-1027, 395-1031 · FAX 391-1034

金泳三대통령의 「세계화 선언」

세계중심에 우뚝서는 풍요롭고 편안한 나라를 만들자

開化期 실패 또 되풀이 할 수 없다

金泳三대통령은 지난 1월25일 세계화추진위원회 위원 간담회에서 21세기 한국 발전의 비전을 제시한 세계화 선언을 밝혔다.

21세기 세계화시대의 국가목표는 '통일된 세계중심국가'이다. 한국은 20세기의 근대화시대에서 공업화 · 민주화시대를 지나 바야흐로 21세기 변화와 개방의 시대를 맞고 있다. 과거 개화기의 실패를 교훈삼아 세계의 모범이 되고 풍요롭고 편안한 富民安國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 확고한 국가목표와 국가비전을 세워야 한다. 21세기 세계화시대의 국가발전의 핵심이자 발전전략은 바로 교육 · 정치 · 문화 · 언론 등 사회 전분야의 생산성과 유연성을 높이는 것이다.

金泳三대통령은 "세계중심국가를 이루기 위한 발전 전략은 모든 부문의 세계화"라고 강조하여, 앞으로의 정국운영이 세계화를 기본이념으로 하여 이루어질 것임을 재확인 했다. 21세기 세계화시대라는 혁명적 변화에 대응하는 생존전략은 바로 '세계화'라는 것이다.

다가오는 21세기는 경제와 기술에 있어서 국경이 없어지고, 국민의 정보, 지식, 기술 수준이 그 나라의 부를 결정짓는 사회가 될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또 국제간 인적 · 물적교류가 급속히 이루어져 하나의 지구촌이 이룩되고, 국가발전에 있어서는 정부보다 개인과 기업이 주도적 역할을 하게 되어, 개인이 추구하는 가치는 다양화함으로써 참여의식이 더욱 높아지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金대통령은 과거 한국은 60년대의 공업화 · 근대화가 비교적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면서, 문민정부 출범으로 완성된 민주국가는 여러나라의 모범이 되고 있다고 적시했다. 변화와 개방의 시대에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세계화시대에 맞는 국가목표, 국가비전이 필요하다. 과거 개화시대에 바로 이 국가목표와 국가비전이 없어서 실패했다는 설명이다.

21세기 세계화시대의 국가목표는 통일된 세계중심국가라고 선언하였다. 다른 나라에 모범이 되어 가보고 싶고, 투자하고 싶고, 살아보고 싶은, 모두가 동경하는 나라이며 대내적으로는 국민 한사람 한사람이 풍요롭고 편안한 富民安國의 나라라는 청사진을 내놓았다.

세계화시대의 국가발전원리는 근대화 · 공업화 시대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이다. 이제는 정부주도만으로는 국가발전을 이룩할 수가 없다. 金대통령은 근대화시대의 생산성이 기능집약적이었다면, 세계화시대에는 지식노동집약적으로써 지식과 정보인력을 많이 가진 나라가 잘살게 된다고 지적. 또 국가발전을 위해서는 공정한 법과 제도, 민간의 자율과 지방자치가 보장되고 국민통합력으로 계층 · 부문간 갈등을 조화하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부연하였다.

이어서 金대통령은 자연과 인간이 서로 보호하며 공생할 수 있는 환경 공동체를 만들어야 하고, 의식과 관행이 합리화되고 질서가 생활화되어야 국가가 발전하는 시대가 됐다고 밝혔다.

결국 세계화시대의 국가발전원리는 정치 · 경제 · 행정 · 사회문화 · 체육 등 모든 부문의 '생산성'과 '유연성'을 높이는 것으로 압축할 수 있다.

세계화선언 이후 개념정립의 혼란을 야기했던 세계화와 국제화의 차이에 대해서도 다시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 국제화는 국가가 중심이 되어 교류를 확대하는 주로 경제에서의 변화를 뜻하고, 세계화는 국가뿐 아니라 지방간 · 기업간 · 국민간의 교류로 모든 부문이 세계 제일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개념으로 볼 때 세계중심국가를 이룩하기 위한 발전전략으로서의 세계화는 문민정부의 국정지표인 신한국창조와 맥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신한국은 세계중심국가이며 창조는 세계중심국가가 되기 위한 세계화의 노력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金대통령은 이러한 세계화 추진의 각론이랄 수 있는 구체 전략으로서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교육개혁 ▲법질서, 경제질서의 세계화 ▲정치와 언론의 세계화 ▲행정과 지방의 세계화 ▲환경의 세계화 ▲문화와 의식의 세계화 등을 들었다.

교육의 세계화를 위해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차세대 양성을 위한 획기적인 교육개혁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교육개혁은 인성과 창의가 중시되고 자율과 경쟁원리가 존중되며, 교육수요자의 선택폭이 크게 확대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임을 밝혔다.

관행과 제도의 합리화를 위한 사법개혁의 필요성, 금융의 경쟁성과 세정의 공정성이 확보되는 경제질서의 세계화도 지적했다. 특히 정치의 세계화에 있어서 깨끗하고 투명한 선거, 정치인들의 전문성과 직종대표성이 크게 높아져야 한다고 적시했다. 언론은 사회의 公器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의 세계화를 위해 행정규제의 완화가 절실하기는 하나, 공정거래 · 노동 · 환경 등 정부개입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부문에 대한 행정개입은 지속 추진할 것이며, 지방자치제의 정착이 지방의 세계화를 위해 필수적임을 지적했다.

우리 전통문화의 가치를 세계문화와 접목시키는 노력과 세계시민으로서의 의식과 윤리를 갖는 개방적 · 합리적인 의식의 필요성도 제시했다.

金대통령은 세계화에 담긴 의미를 일류화 · 합리화 · 일체화 · 한국화 · 인류화라고 밝혔다. 세계화는 "옛 껍질을 깨고 새로 태어나고자" 하는 결단이며 차세대를 위한 개혁이라고 밝히면서, 모든 역량을 세계화에 결집시켜 나가자고 호소했다.

李東柱기자

이번호지면

2면 • 金泳三대통령 연두 지방순방
3면 • 李相龍 강원도지사 인터뷰
• 170회 국회통과 개정법률案
4면 • 일본大地震 현장에서
5면 • 남북經協의 새물꼬를 튼다
• IAEA 굴업도 선정 진단

특집 : 출발, 세계화

6 · 7면 • 「세계화 지표」를 알아본다
8 · 9면 • 총리공관 특별좌담회
- "싱가포르 공무원을 배우자"
• 참석소감
10면 • 金鎭炫 세계화추진위원장 강연
• 세계화추진委 12개 과제
11면 • 세계화추진기획단장 인터뷰
12면 • 언론보도 … 部處의견
• 승용차 「10부제」 안내
13면 • 종합청사게시판 / 지방메모
• 내무부 토지전산망 가동
• 이달의 독립운동가
14면 • 세계화 실천 현장
- 일선 과장 3인의 각오 · 포부
15면 • 내가 읽은 책
- 「21세기 미래예측」
- 「PR · PR」
16면 • 와이드 정부간행물

국정녹음서비스 발간
1. 25 제11호 세계화추진委 간담회 연설
1. 28 제12호 金대통령 킹 平和賞수상 연설

대통령 年頭 지방순방

江原道에 세계제1의 淸淨휴양지 조성
光州를 21세기 주도할 첨단과학도시로

金泳三대통령은 1월24일 江原道 및 교육청, 1월27일은 光州광역시 및 교육청, 全南道 및 교육청을 각각 방문,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받았다.

강 원 도

江原道는 업무보고에서 세계 제1의 청정휴양지 조성, 江原道域의 균형개발, 정도 6백주년 기념사업 등 올해의 역점사업을 보고했다.

청정휴양지조성을 위해 우선 도시하수종말처리장 등 25개소 건설에 1천2백41억원을 투자한다. 종합 휴양단지 18개소 등 4계절 체류형 휴양관광지를 개발하고, 10개소의 자연휴양림을 조성할 방침이다. 또한 江原도 전역을 국민여가지대로 개발하기 위해 민간자본을 적극 유치하고 공영개발 방식을 도입해 기업의 투자를 촉진한다.

江原道域의 균형개발을 이루기 위해 우선 지방도, 군도 등 1백27개 노선 2백33㎞를 확충한다. 특히 통일시대에 대비하여 철원과 고성을 잇는 1백45㎞, 2백90㎢의 휴전선 인근지역 토지이용계획을 세우고 南北접경지역 개발에 힘쓴다. 태백 등 4개 市·郡지역을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하여 탄광지역의 활력회복을 꾀하며 산간오지 마을에 대한 투자도 확대해나간다.

지방의 세계화 참여를 위해 中國, 日本, 러시아 등 주변국 지방정부와의 민간·공무원의 교류확대를 꾀한다. 공무원 전문인력 양성, 국제행사의 적극 유치 등 江原道의 세계화 6대 시책을 적극 추진한다.

농어촌의 자신감 고취를 위해 UR 농정시범郡 육성방안을 마련, 지역특화사업을 추진한다. 무공해 자연농산물 생산공급을 위해 철원 등 15개 지역에 청정 자연농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4대 통합시 출범에 따른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등 지방자치의 역량을 제고한다. 定道 6백주년을 맞아 江原 6백년 道史를 발간, 역사를 재조명하는 등 모두 3개 분야 21개 주요 기념사업을 펼쳐 나간다.

강원도교육청

江原道교육청은 창의적이고 애향심이 투철한 신한국인 육성에 교육지표를 두고 '녹색마음, 녹색강원' 가꾸기 교육과 韓民族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통일대비 교육을 강화한다.

'녹색마음, 녹색江原' 가꾸기 교육을 위해 환경·관광교육 실천계획을 세워 애향심을 지니고 고장의 자연환경을 가꾸어나갈 수 있도록 한다.

江原道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통일대비 교육,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와 체제의 우월성에 대한 신념을 고취, 민족공동체의식 교육 등을 통해 통일의지를 함양한다. 통일문제에 대한 개방적 태도를 육성하는 등 통일교육에 내실을 기한다. '江原학생통일교육수련장'의 운영을 확대하여 국가안보의식을 제고시키고 평화통일 의지를 고양할 수 있도록 한다.

대통령 지시사항

'江原 향토축제'의 해외홍보 계획은 좋은 구상이며, 해외시장 개척단을 파견할 때 관광홍보도 함께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UR시범군으로 지정한 평창군의 농산물 판로개척을 행정이 총력 지원함으로써 UR극복의 모범사례를 만들어주기 바람.

주요 국가별 전문공무원 육성을 위해 어학·해외연수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바람.

관광객이 많은 江原道의 교통시설, 응급구조체계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江原道 교육청의 '녹색江原 가꾸기' 사업을 시민·환경단체와 연계하여 범도민 운동으로 확산하기 바람.

「江原 향토축제」 해외홍보는 좋은 계획
5·18정신을 새光州건설 에너지로 승화

광주광역시

光州광역시는 올해 세계화 시범 도시의 기반조성, 첨단과학산업 도시의 본격 육성, 세계속의 예향으로의 발돋움 등 5대 과제에 중점을 둔다.

첫째, 세계화 시범도시의 기반조성을 위해 우선 '光州평화선언'을 추진하는 등 '민주성지'와 '평화도시'의 이미지를 동시에 구축해나간다. 국제컨벤션센터를 설치하는 등 '세계화 10대전략'을 수립해 세계 속의 光州를 지향한다.

둘째, 첨단과학산업도시로의 본격 육성을 위해 전자, 신소재, 생명공학 등의 첨단과학산업단지(5백86만평)와 외국인기업전용단지(28만평)를 조성한다. 무역회관, 중소기업지원센터 등을 건립해 중소기업의 창업과 생산활동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한다.

도로·하수도망의 전산화를 통한 지형정보시스템을 구축('95~'96)하고, 산업기술, 관광 등 17종의 정보를 제공하는 광역정보화센터 건립('95~'97) 등 정보화 사회의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셋째, 세계 속의 藝鄕으로 발돋움하다. '光州비엔날레'를 창설하여 올해부터 세계적인 미술전람회를 격년제로 개최하며 韓國문화예술의 산업화 및 지방도시의 세계화에 기여하도록 한다. 지금까지의 도심공간에서의 음악연주를 판소리, 교향악, 미술 등으로 확대하여 '도심속의 작은 예술축제'를 상설화한다. 문화예술을 관광과 연계하여 미래형산업으로 육성해나간다.

넷째, 행정부터 1등경쟁력을 확보한다. 아껴쓴 물의 量만큼 수도요금을 감면하는 등 市政의 가치기준을 시민에게 두고 '따뜻한 봉사'를 실현한다. 삶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사회적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도시건설을 추진한다.

다섯째, 선거시기를 틈탄 사회기강 이완을 방지하는 등 깨끗한 선거혁명을 이룩한다. 재정확충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자치역량을 강화한다.

전 라 남 도

全南의 세계화 3대전략인 '全南경제 한아름 키우기', '全南이미지 한차원 높이기', '남해안 개발구상의 구체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첫째, 全南경제 한아름 키우기를 위해서는 三湖공단(영암郡 삼호面), 栗村공단(여천郡 율촌面), 大佛공단(영암郡 삼호面)등 3대 공단을 조성해 공업화를 촉진하고 '민자유치 10대 프로젝트'를 발굴해 대기업의 참여를 유도하는 등 적극적인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한다.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비닐하우스 재배를 권장해 생산성을 높이고, 일본 등 대외수출에 의한 농수산물의 판로개척에 주력한다. 잘사는 어촌을 건설하기 위해 올해부터 기르는 어업 육성 등 '수산진흥 5개년 계획'을 적극 추진한다.

둘째, 全南이미지 한차원 높이기를 위해 지역의 원로급 인사를 자문 평가위원으로 위촉하고 민간단체가 주도하는 범도민운동을 벌인다. 도민의 장점 알리기, 지역인재 가꾸기 등 '全南이미지 높이기 3대 운동'을 전개한다.

셋째, 南海岸 개발구상을 구체화하기 위해 국가경제사회발전에 부합할 수 있는 '全南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을 세워 추진한다. 全南과 慶南이 공동으로 참여, 목포와 부산을 잇는 '남해안 개발계획'을 수립해 해양지향적 개발전략을 추진한다.

광주광역시교육청

光州광역시교육청은 올해의 교육목표를 참된 인간성 함양과 교육 본질을 추구하는 교단선진화의 구현에 둔다.

참된 인간성 함양을 위해서는 우선 모든 학교에 '예절교실'을 운영해 誠·敬·信을 바탕으로 한 기본예절과 행동규범을 어려서부터 생활화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각종 교육자료를 활용해 자기성찰을 통한 건전한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한다. 가정교육 결손 학생들을 학교에서 돌보아주는 '학교사랑방' 운영, 고아원, 양로원 등과 각급 학교와의 결연 등을 통해 훈훈한 인정을 나누며 더불어 살아가는 화합의 풍토를 조성해나간다.

교육의 본질을 추구하는 교단선진화 구현을 위해서는 컴퓨터 補助授業의 도입 등 수업체제를 혁신한다. 컴퓨터실, 어학실 등 특별교실 운영을 확대하는 '학교선진화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세계화에 부응하는 학교선진화를 추진해나간다.

전라남도교육청

全南교육청은 올해의 교육지표를 신한국 창조를 위한 인재 육성에 두고 도덕적 인간 교육의 실천과 농어촌 교육의 활성화에 중점을 둔다.

도덕적 인간 교육의 실천을 위해 가정생활 중심의 '마음의 교육'을 실천한다. 자연사랑의 맑은 품성과 극기력·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학생 야영·수련 활동을 강화한다.

고장의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킬 수 있도록 전통사상의 이해, 南道의 맛·멋·소리찾기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1校 1민속놀이의 전통화를 통해 南道 전래의 민속놀이를 계승시켜나가도록 한다.

농어촌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학교장 운영 체제를 확립해나가고 모두 77억6천만원을 투입해 학교시설·설비를 현대화한다. '市·郡別 교육발전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고 지역사회·학교 발전방안의 공동모색을 위해 교직원·지역민의 합동 해외연수를 추진한다.

교원의 사기진작에 힘쓰고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하는 등 적정규모의 학교를 육성해나간다.

대통령 지시사항

첨단과학도시 육성을 통해 光州가 21세기의 주역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첨단산업체와 연구소 유치에 民官이 함께 노력하기 바람.

光州비엔날레를 통해 韓國미술이 세계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 바람.

망월동 묘역 성역화, 상무 신도심개발은 5·18정신을 새로운 光州건설의 에너지로 승화시키는 사업이므로 정성을 다해 추진하기 바람.

全南이 최고의 투자여건을 갖춘 지역이 될 수 있도록 규제완화, 노사화합, 행정서비스의 획기적 개선을 추진하기 바람.

남해안 개발구상은 정성을 다해 추진하고 지역 특산물을 세계 일류상품으로 만들 수 있도록 수출 농업을 육성하기 바람.

具校永기자

인터뷰

李相龍 江原道지사

"環東海경제권 중심지에서 한몫 하겠다"

곧 개막될 '지방自治시대'를 앞두고 일선 市道마다에서 「변화」의 물결이 일고 있다.

江原도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었다. 설 연휴 직전에 찾은 江原道는 곳곳에 내걸린 「2000년대 제1강원」이란 슬로건에 걸맞게 온 지역이 활력으로 가득차 보였다. 올해로 定道 6백년을 맞아 새출발의 의지를 다지고 있는 江原道의 李相龍지사는 "더이상 강원도가 '미래의 땅'으로만 머물러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거의 무한대로 보존된 자원 등 천혜의 자연환경 속에 내재된 성장잠재력, 거기에다 다가오는 環태평양시대의 교두보 역할을 담당할 지정학적 중요성까지 고려하면 강원도는 능히 '한국의 제1'이 아니라 '세계속의 제1'도 될 수 있으리란 설명이었다.

李지사는 특히 "올해는 강원도가 심혈을 다해 추진하고 있는 'KARTELL 구상(1단계-동해 주변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 확대, 2단계-지방간의 상설협력기구 구성, 3단계-강원도가 중심이 된 관광 무역중심의 네트워크 구축)'이 제 기능을 다할 것으로 전망한다"면서 "강원도가 환동해권의 중심에 서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역설했다.

- 지방의 세계화에 역점을 두고 계신 듯한데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環동해권' 구상과 관련하여 더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지요.

"동해를 둘러싼 中國·日本·러시아 등이 모두 동해진출전략을 갖고 있을만치 동해가 차지하는 위치는 막중합니다. 이렇듯 날로 더해가는 동해의 중요성에 비추어 지난해 6월 강원도는 환동해 경제권을 대비하는 카르텔구상을 내놓게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동해진출의 거점이라 할 中國의 찌린(吉林)省, 러시아 沿海州, 日本의 돗도리(鳥取)縣과 교류 협력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이를 토대로 지난해 11월 束草에서 개최한 '환동해권 4개국 지방정부 知事 省長회의'는 권역내 공동번영을 위한 협력의 필요성을 공인하는 등 주요사안에 대해 합의를 도출 이를 문서화하여 발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올해의 계획과 전망은 어떻습니까.

국제공항·항구·고속철 등 입체 수송체제 갖춰
中 吉林省·러 沿海州·日 돗도리縣과 교류확대

"강원도는 '세계로 열린 미래로 향한 강원의 세계화'를 위해 知事 省長회의의 후속조치로 이의 정례화를 위한 실무책임자 회의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교류 협력을 위한 상설협의기구의 구성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미 찌린省과는 경제협력협의회 구성에 합의, 이달안에 강원경제무역사무소가 현지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束草-포시에트-琿春간 항로개설도 추진하고, 민간교류의 확대방안으로 東北亞청소년체전, 경제조사단 교환 등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강원 세계화 6대시책으로 전문인력 양성, 강원특산품 개발, 국제행사 유치 등도 펼쳐갈 것입니다."

- 嶺東국제공항, 동서고속철도 등 강원도의 미래를 열 대사업들이 속속 이어지는 모양인데…

"환동해권 구상의 최종 단계는 무역 관광 중심의 수송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것입니다. 환동해권시대를 주도하기 위해 국제공항, 국제항구 그리고 이를 수도권으로 연결할 수 있는 고속교통망의 구축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국제공항과 동서고속철도에 관해선 강원도 순방 때 金泳三대통령의 확약이 있었고, 고속도로와 국제항구도 적지물색을 위한 연구용역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런 기반시설들이 갖춰지면 환동해권 구상의 3단계 사업이 앞당겨짐은 물론 釜山항의 적체해소 등 국가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이제 곧 본격적인 지방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강원도의 준비상태는 어떻습니까. 지방재정의 확충, 조직의 정비 등 할 일이 무척 많은데요…

"지방4대선거를 맞아 우선 공명정대한 선거를 치르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새로운 공직자로 다시 태어나자는 각오로 '변화1백80도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혁명적 발상의 전환을 통해 지역자치의 뿌리를 다지자는 것이지요. 지방자치의 역량은 지방재정력과 조직의 경제성이 요체가 된다 할 때, 새해 4대 통합시의 출범과 행정구역의 개편 등은 都農간의 균형발전과 행정서비스의 기반을 마련했다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걸맞는 재정의 확보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민간부문의 자본 기술 정보 등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등 행정에 경영기법을 접목시켜 재정의 확충과 효율을 높여갈 생각입니다."

- 21세기 강원도의 청사진을 뭉뚱그려 펼쳐주시지요.

"강원도는 환동해경제권의 중심지, 통일한반도의 중추로서의 역할이 기대될 뿐 아니라 총면적의 81.5%에 달하는 산림 등 자연자원을 바탕으로 세계적인 관광휴양지로 발돋움할 수 있는 희망의 터전입니다. 이에 강원도는 全도역의 관광화, 全산업의 저공해화, 교통망의 고속화, 강원지방의 세계화라는 발전방향에 맞춰 세계속의 강원도로 성장해갈 것입니다. 지금 강원도는 지역개발과 보존이 조화를 이룬 '2000년대 제1강원'의 목표를 앞당기는데 총체적 역량을 쏟고 있습니다."

春川=徐光植기자

170회 정기국회 통과개정법률안⑥

환 경 부

토양오염 측정결과 공개

□ **토양환경보전법(1995. 1. 5 제정)**

▲환경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토양측정망을 상시 운영하고 토양오염 정밀조사를 실시하며 측정결과를 공개토록 함.

▲ 토양오염유발시설 설치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고 토양오염방지조치를 하여야 하며 정기적으로 토양오염검사를 실시, 그 결과를 비치토록 함.

▲시·도지사는 시설설치자가 토양오염방지조치를 이행치 않거나, 토양오염검사결과,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하고, 시정명령을 이행치 않거나, 이행하더라도 토양오염이 개선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토양오염유발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토양오염의 정도와 그 영향에 따라 토양오염우려기준과 토양오염대책기준을 정하고 환경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토양오염도가 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토양오염방지조치를 명하거나 토양보전대책지역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시·도지사는 토양보전대책지역에 대하여 오염토양개선사업 및 토지 등의 이용방안 등이 포함된 대책계획을 수립·시행하되 오염토양개선사업은 오염원인자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도록 함.

▲시·도지사는 토양보전대책지역내에서는 그 지정목적을 해하는 토지의 이용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폐기물처리비 차등징수

□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1995. 1. 5 제정)**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기본계획수립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계획이 반영토록하고 공업단지, 관광단지, 주택단지 등의 개발자는 그 단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함.

▲폐기물처리비용의 징수를 처리시설이 설치된 지역과 그외 지역으로 구분, 차등징수하여 폐기물처리시살의 설치를 유도하도록 함.

▲일정규모 이상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시에는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동 위원회로 하여금 입지선정 및 시설설치로 인한 피해대책을 수립토록 함.

▲일정규모이상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시·그 설치계획에 대한 승인으로써 타 법령상의 각종 인·허가를 대체하도록 하여 폐기물 처리시설이 원활히 설치될 수 있도록 함.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관은 주변지역주민에 대하여 소득증대·복리증진 등의 지원을 하도록 하고 특히 직접 영향권내의 주민에 대하여는 집단이주대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시에는 조경, 방음 등의 부대시설을 함께 설치토록 하고 정기적으로 환경영향을 조사·공개토록 함.

먹는 샘물외의 물은 販禁

□ **먹는물 관리법(1995. 1. 5 제정)**

▲먹는 샘물의 정의를 암반대수층내의 지하수, 용천수 등 수질의 안전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깨끗한 자연상태의 물로 한정하고 먹는 샘물외의 물은 판매를 금지함.

▲환경부장관은 지하수 오염이나 지반침하 등이 우려되는 지역을 먹는 샘물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함.

▲먹는샘물 제조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수원개발허가를 받도록 하고 환경영향조사서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의 영업허가를 받도록 함.

▲환경부장관은 먹는샘물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로부터 지하수자원의 보호와 먹는물 수질개선을 위한 부담금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함.

▲환경부장관은 먹는물의 성분에 관한 기준을 설정하고 광고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도록 하며, 먹는물 관련 영업자에 대하여 각종 행정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함.

공공환경시설 기술진단

□**환경기술개발및 지원에 관한 법률(1994. 12. 23 제정)**

▲환경부장관은 환경기준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하여 우수한 환경기술의 사용·보급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환경부장관은 중소기업의 환경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기술을 지원하고 공공의 환경시설에 대하여 기술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저오염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소비자의 환경보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환경표식의 사용을 인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일본 大地震 현장에서

이웃을 먼저 배려하는 국민의식

자기 본분에 충실한 공직자 자세

國益 앞세우는 언론의 理性 보도

兪 哲 濬 주일대사관 공보관

'阪神大震災'으로 공식명명된 일본 중부지방의 대지진은 5천명 이상의 사망자와 2만7천여명의 부상자, 30여만명의 이재민을 남기는 戰後 최대의 참사로 기록되면서 '安全神話'의 '經濟大國'인 일본인들의 자존심에 깊은 골을 남겨 놓았다.

대자연의 힘에 속수무책인 인간의 한계를 절감시켜주기도 한 이번 참사는 이제 본격적인 복구 단계로 접어들고 있으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의 물질적·정신적 피해는 수치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여서 그 후유증은 상당기간 동안의 '餘震'을 수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참사의 중심지였던 고베(神戶) 및 오사카(大阪)지역은 재일한국인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 현재까지 1백30여명의 인명피해가 확인되었다.

1923년의 관동대지진 당시 재일한국인들이 직면했던 잔혹한 참상의 기억이 아직 생생하게 남아 있는 우리에게는 이번 지진 소식과 동시에 알 수 없는 일말의 불안이 뇌리를 스쳤던 것도 사실이다.

비상시에 노인·어린이 여성을 우선시하는 「상식」을 철저히 유지

그러나 아직까지는 이렇다할 불상사의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으며 경황중에도 한국인과 일본인, 그리고 민단계와 조총련계 교포간의 온정어린 美談들이 전해지고 있어 그러한 불안이 아직까지는 기우에 불과했다는 느낌을 주고 있다. 오히려 이번 참사가 한·일 양국민의 상대방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될지도 모른다는 분석도 일각에서는 대두되고 있다.

다만, 조만간 본격화될 사회간접시설 복구 및 피해자들에 대한 긴급 재정지원 과정에서의 재일한국인을 비롯한 외국인 피해자들에 대한 형평의 문제가 불씨로 남아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일본 국내법에 따라 해결될 문제이겠으나, 객관적인 설득력을 수반하는 조치가 이행되어 "역시 일본은 …"이라는 해묵은 감정이 또다시 재연되는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추이를 지켜보고자 한다.

현지에서 이번 지진발생과 그 구조·복구과정 등을 지켜보면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피해당사자들의 대응자세와 일본 언론의 보도자세였다.

피해 주민들의 냉정하고 침착하다 못해 의연하게까지 느껴졌던 모습들은 비교적 오랜동안 일본인들과 접해왔던 필자에게도 그들의 실체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다.

상세한 개별 사례들은 이미 국내언론들에 의해 다각적으로 보도되었지만,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재난 속에서도

대자연의 힘에 속수무책인 인간의 한계를 절감시켜준 이번 일본 중부지방 대지진의 참사는 이제 본격적인 복구 단계로 접어들고 있으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의 물질적·정신적 피해는 수치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여서 그 후유증은 상당기간 동안의 **'餘震'**을 수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무질서와 소란 그리고 약탈·방화·폭동 등 물리적 불상사가 전무했던 배경은 무엇이었을까. 모든 공공장소(식량·구호품 배급소, 공중전화, 화장실 등)에서 양보와 줄서기 등 '기본질서'가 지켜졌고 비상시에 노인과 어린이, 여성이 우선시되는 '상식'이 철저히 유지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현실과 비교하여 가슴 답답해짐을 느낀 것이 필자뿐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러한 일본인들의 질서의식과 협동정신의 근원은 역시 교육이 아닌가 여겨진다. 공동체내에서의 질서를 강조하며 "타인에게 폐(迷惑)를 끼쳐서는 안된다"고 가르치는 일본인 특유의 철저한 의식교육이 유년기에서부터 이루어져 몸에 배어 있을 뿐 아니라, 개인보다 집단을 우선시하며 자신의 감정 표현을 극도로 억제하는 특유의 국민성향과 어우러져 그러한 전례없는 양상으로 표출된 것으로 생각된다.

상상을 초월하는 피해규모에 망연자실해하는 허탈감도 작용했겠지만, 일상생활의 가장 초보적인 질서가 유지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과 비교해볼 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주는 장면들이었다.

일부언론의 보도자세도 많은 것을 시사해주고 있다.

재일한국인 등 2백여명의 외국인 피해자들에 대한 보도가 거의 눈에 띄지 않는 등의 배타성과 폐쇄성, 그리고 부상중인 노파에게까지 마이크를 들이대었던 신참 리포터의 초보적인 실수 등을 제외하고 언론의 보도 자세라는 관점에서만 생각해본다면, 국가적인 위기상황하에서의 일본언론은 무엇을 어떻게 보도해야 하는가라는 기본에 철저하려고 애쓰는 모습이었다.

이번 지진에 대한 일본정부의 대응자세 및 위기관리 체제에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 중론이며 사상자 구조가 일단락된 현시점에서는 정치권의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내각제하의 지방자치제도와 그 관계법령 등의 구조적 미비외에도, 서로 기반과 정책방향이 다른 자민·사회·사키가케 3당의 '느슨한 連政'에 대한 비판이 일반 국민뿐 아니라 재계·경제계 등 곳곳에서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언론은 지진발생이후 약 1주일간, 정부나 산하기관 등에 대한 책임 소재 규명이나 비판 등을 자제하면서 각사의 개별의견을 최대한 배제한 냉정한 사실보도에 치중했다.

정부의 발표나 대기업들의 지원대책 브리핑 내용 등은 충실히 보도하면서도 각 언론사가 사전에 인지했던 피해지역에 LPG 가스누출의 우려가 있다는 사실은 공식발표시까지 24시간동안 자발적으로 보도를 자제하는 등 국민 전체에게 안도감을 주는 동시에 피해 주민들에게는 불안감을 안겨주지 않으려는 일부언론 특유의 '국익우선'의 보도자세를 충실히 견지했던 것이다.

대형사고가 발생하면 명단발표에 이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책임소재 논란과 자극적·비판적인 보도경향은 거의 눈에 띄지 않았고, 국익이라는 큰 시각에서 사건수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의 보도를 중시하는 것으로 느껴졌다. 또한 정부의 미흡한 대응자세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는 시점에도 양자간의 노골적인 감정 분출을 자제시키려는 완충작용을 시도하고 있었으며 시신 등 자극적인 장면의 방영(또는 사진게재)도 극히 자제하고 있었다.

보도경쟁은 있으나 미확인 또는 과장보도는 철저히 배제됐다

보도경쟁은 당연히 있으나 사실이 확인되는 범위내에서의 경쟁에 국한되며 '미확인' 또는 '과장' 보도는 철저히 배제되고 있는 것이다.

대형사고에서 기동성을 발휘하는 각 TV사의 뉴스캐스터들은 가능한한 냉정·침착한 자세를 유지하려고 애쓰는 모습이었으며 억양·어휘까지 'Tone-down' 시키려는 노력이 엿보였다. 지진발생후 일주일만에 만난 한 TV방송사의 고위간부는, 지진발생직후 현장에 출동하는 일선 기자에게는 "피해주민들이 무엇을 가장 필요로 하고 있는지를 중점 취재"토록, 그리고 뉴스캐스터들에게는 "흥분하지 말고 차분하게, 국민들에게 안도감을 주는 진행"을 되풀이해서 주문했다고 털어놓았다.

엄청난 자연재해에도 불구하고 2차적인 人災를 예방할 수 있었던 것은 성숙한 국민의식과 함께 기본사명에 충실한 언론의 역할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은 아닐까.

이제 일본언론은 사태발생 직후의 정부의 대응자세에 대한 是非와 법적·구조적 문제점, 그리고 각 분야별 향후 전망 및 대비책 등을 냉정히 분석하기 시작하였다. 현 우라야마 내각이 이번 사태로 커다란 정치적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전망도 일각에서는 대두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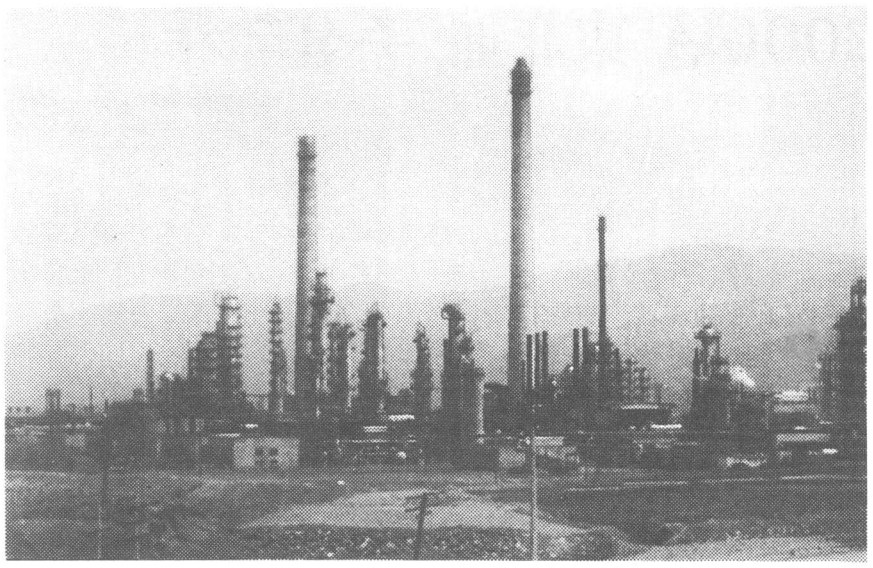
제2차 세계대전 종료후 50여년간, 일본은 경제적 성장과 물질적 풍요를 추구해왔고 그것을 이루었다. 일본 지식인들간에는 이번 참사를 계기로 이제 정신적·사상적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다.

이번 일본의 대지진이 시사해주는 것은, 대자연의 섭리는 막을 수 없다 하더라도 그에 수반되는 人災는 후천적인 노력으로 막을 수 있다는 사실이다.

극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보다 이웃을 먼저 배려할 줄 아는 성숙한 국민의식, 어떠한 상황하에서도 자신의 본분에 충실한 공직자, 그리고 냉철하며 自社의 이익보다 國益을 항상 우선시하는 이성적인 언론. 이 세가지 요소는 천재지변에 대비하는 길일 뿐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世界化'를 실현하는 중심과제이기도 할 것이다. 이웃의 참사에 따뜻한 온정의 손길을 보내는 여유와 함께, 내 자신부터 돌아보는 반성의 기회를 갖고자 한다. ■

정부의 交易활성화 방침

한국기업 북한진출의 새 물꼬를 튼다



南北경협에 대해 성급한 기대를 갖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적은 폭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사진은 북한의 선봉지역 화학단지.

통 일 원

올해는 南北經協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지난해 일련의 활성화 조치를 확정한데 이어 올해 南北경협의 세가지 기본원칙을 정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동안 핵문제에 대한 南北韓 당국의 정치적 입장차이로 살얼음판을 걷듯 진행돼온 南北관계가 올해에는 경협의 활성화라는 새로운 물꼬를 틀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여진다.

우선 지난해 12월에 쌍용을 필두로 기업인들의 訪北이 시작됐고, 위탁가공교역을 포함한 南北교역이 확대되고 있다.

지난달 26일 현재 통일원의 승인을 받은 訪北 신청 기업은 대우, 럭키금성, 삼성, 현대, 대동화학, 영신무역 등 10개 대기업 및 중소기업이다. 이중 이미 訪北을 완료한 기업은 대우, 삼성, 신원, 쌍용, 한화 등 5개기업이다.

南北교역액 규모에 있어서도 지난해에만 모두 7백61건 1백42품목에 걸쳐 2억2천7백90만달러의 실적을 거두었으며 이는 93년대비 14.6%가 증가한 것이다. 위탁가공교역액도 1백7건에 1천6백37만달러를 기록, 93년도 4백38만달러의 3.7배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다음과 같은 올해 南北경협 추진의 3대 원칙을 세워놓고 있다.

첫째, 南北경협은 南北대화와 南北관계의 진전에 따라 단계적으로 신중하게 추진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적 입장이다.

아직도 北韓측은 우리측의 경협활성화 방안을 비난하면서 민간기업들과는 부분적으로 연락채널을 가동하는 이중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北韓의 이중적 태도와 金正日정권의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南北경협은 절대로 서둘러서도 안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신중하고 질서있는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둘째, 南北한 당국간 투자 및 신변안전보장 등에 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이후에 南北경협을 본격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우리기업이 北韓에서 공장을 세우고 北韓주민을 고용해 물건을 만들어 이를 南北한이나 다른 나라로 되팔 수 있는 것이 본격적인 경협이고 보면 투자보장, 이중과세 방지 등 經協 활성화를 위한 선결과제가 해결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셋째, 정부는 민간차원의 南北경협

南北경협추진 3대원칙

대화·관계 진전따라 신중하게
투자·신변보장 선결과제 해결
法절차·기업 책임하에 질서있게

은 법절차와 기업의 책임하에 질서있게 추진되도록 조정할 방침이다.

그밖에도 정부와 기업 모두 다른 정치·안보상황을 함께 고려해서 經協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3대원칙하에 정부가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분야는 南北경협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다.

南北교역확대를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물자교류에 수반되는 돈을 결제해주는 장치, 즉 청산계좌를 설치해야 한다. 또 對北투자기업 대우문제, 투자이익금 송금문제 등 주요사항에 대한 합의를 해야한다.

南北기업간 또는 당국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어떤 절차를 통해 누가 분쟁의 판단권을 가지는가에 대해서도 분명히 해야 한다. 北韓에 진출한 우리기업과 개인에 대해 南北한이 각각의 국내법에 따라 과세할 경우 발생할 이중과세의 문제에 대해서도 해결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北韓은 대내적 긴장 조성 등의 필요성으로 인하여 南北경협을 공개적·본격적으로 수용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 기업의 투자를 羅津·先鋒지역으로 국한하고 우리기업을 제한적·선별적으로 초청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南北경협은 위탁가공 교역을 중심으로 활성화하면서 실제 南北경협이 착수되는 것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南北경협에 대해 성급한 기대를 갖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그 교역규모에 있어서도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적은 폭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물론 기업의 입장에서도 모든 다른 정치·안보상황을 함께 고려하면서 장기적 안목으로 차분하고 질서있게 추진해야 하기 때문이다.

具校永기자

IAEA 굴업도 선정 진단

기초지질조사로 타당성 판명

許 南 과학기술처 안전심사관

최근 굴업도 방사성폐기물 처분부지의 적합성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전문가의 설명회가 서울에서 있었다. 이 자리에서 전문가들은 그들의 오랜 경험과 과학적인 근거를 토대로 한국정부가 굴업도를 방사성폐기물 처분부지로 선정한 것은 합리적이고 타당하다는 결론을 제시하였다.

그때 기자들의 질문은 정밀지질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초조사만으로 부지의 타당성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었느냐는 질문에 초점이 맞춰졌다.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시각을 잘 대변한 질문이었는지도 모르겠다.

이와 같이 정밀지질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처분부지를 선정한 것은 기술적 측면보다는 주민 수가 적어 반대가 적을 것이라는 사회적 측면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었을 것이라는 부정적 견해가 얼핏 설득력 있게 들리기도 하나, 이는 처분장 부지확보의 개념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데서 기인한 것으로 본다.

현실·이상 조화 최적대안

많은 부지 중에서 최적의 부지를 고르는 것을 영어속담을 빌리자면 '최적조건의 아내를 고르려고 하는 사람은 결코 결혼할 수 없다(A man shopping for the best wife can never be married forever)'는 경우와 비유된다.

흔히 결혼상대를 고를 때 고려되는 요소로서는 재력, 학력, 인간성, 외모, 신장 등의 조건을 들 수 있겠으나 자신이 바라는 이상형과 꼭 일치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고 보면 상대와 이해하고 적절한 조화를 이룬 선택이 결국은 최적대안(Optimal Option)이 아닌가 한다.

마찬가지로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문제도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선정된 부지 중에서 주민수용이 가능한 부지로 선택하는 것이 현재의 세계적인 추세이다.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부지를 확보하여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국가들은 한결같이 모두가 우리와 같은 절차를 밟았다.

제반기술·공법 모두 갖춰

기초지질 조사를 통하여 제시된 대상 후보지 중에서 처분부지를 선정한 후 정밀지질 조사를 실시하여 처분장의 상세설계와 공학적 방벽(Engineered Barrier)의 규모 및 공사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결정해나가는 것이 국제적으로 인정된 절차이다.

이와 관련하여 IAEA전문가는 현재 선진각국에서는 이미 처분장의 안전성 확보에 관련된 제반 기술과 공법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제 우리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전문기관에서 검토한 결과만큼은 충분히 믿을 수 있는 신뢰감 조성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본다. IAEA는 회원국의 방사성폐기물 관리계획이 기술적으로 타당하며 국제적으로 합의된 안전원칙과 기술기준에 부합되는지를 독립적인 입장에서 평가확인하는 공인된 기관이기 때문에 어느 국가나 특정기관의 영향력하에서 초청국의 입장이나 요구를 고려할 수 없다는 점을 우리가 분명히 알 필요가 있다.

우리의 최종 목표는 원자력의 이용에 따라 필수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방사성폐기물의 안전관리를 오늘의 문제로서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향후 수백년에서 수만년까지 우리의 후손이 안전하도록 완벽한 관리시설을 갖추는 일이다.

불신의 벽을 허물자

앞으로 정부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절차에 따라 정밀 지질탐사를 비롯한 부지특성 조사와 안정성평가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할 것이며 사업추진 단계마다 국내외의 독립적이고도 엄격한 안전심사와 기술검토를 통하여 안전성을 확보해나갈 계획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절차는 국민의 의견을 존중해나가는 과정이므로 국민 수용성(Public Acceptance)의 증진을 위하여 모두가 성숙한 자세로 합심하여 불신의 벽을 허무는 것이 지혜롭다 하겠다. ■

세계화지표 : 21세기 국가비전 설계도

2020년 통일공화국

2000년 東北亜 중심국가

金泳三대통령의 '세계화선언'에 뒤이어 새로운 국정목표로 세계화가 적시됐다.

올해를 '세계화 元年'으로 규정한 정부 각 부처의 변화노력도 눈에 띈다. 민간과 정부가 힘을 합한 세계화추진위원회도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국무총리가 직접 각 부처의 실무책임자들과 세계화에 대해 토론하고 고민하는 모습도 보인다. 개인 기업의 세계화가 강조되는가 하면 나라 전체의 환골탈태가 요구되기도 한다. 바야흐로 '세계화'로 대표되는 민족의 대약진 열기가 뜨겁게 분출되는 형국이다.

거기에다 세계화의 개념이 무엇인지, 왜 지금 세계화가 강조되는지, 이제까지의 근대화 국제화와 세계화는 어떻게 다른지, 세계화는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인지 등에 관한 본격적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나온 '세계화지표'는 한창 제기되는 다양한 물음들에 대한 객관의 잣대를 제시하고 그 준거에 기대어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냉정히 짚어보자는 데 효용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활용가능한 객관적 기준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 각 부문의 수준을 수치화, 세계와의 격차를 가늠해볼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가 단계별로 ⤴

총론

총괄부문에서는 ▲세계화의 역사적 의의와 중요성을 밝히고 ▲한국의 세계화 수준을 짚어보는 동시에 ▲세계화를 통한 21세기 한국의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면서 ▲세계화추진의 기본전략을 제시했다.

2000년 세계화 45% 목표

먼저 세계화의 목표는 2020년 '통일된 세계중심국가'로 정해졌다. 그때가 되면 정치면에서는 민족공동체를 이룬 바탕 위에 선진민주주의가 실현된다. 또 정부도 봉사중심의 기업가형으로 바뀌며 지방자치제가 성숙된다. 경제면에선 1인당 GNP가 3만달러를 넘어서 세계경제의 7대강국에 진입한다. 사회분야도 완벽한 복지환경 속에 정보화·개방화사회의 혜택을 누리는 한편 우리나라가 세계문화와 교육의 중심지로 발돋움하게 된다.

이때의 세계화수준은 세계5위를 기준으로 1백20%에 이른다. 분야별로는 정치 100%, 경제 1백50%, 사회 1백%, 문화 1백30%이다.

이보다는 가깝게 2000년과 2010년을 목표년도로 한 단계별 지표도 세워졌다. 각각 동북아 중심국가와 환태평양 중심국가를 겨냥, 국가비전을 펼친 것이다.

1단계인 2000년 세계화목표는 정치면에선 생산적인 정치, 대의민주주의 정착, 정부경쟁력 제고, 지방자치제 정착 등을 이뤄나가는 것으로 요약된다. 경제규모는 세계 10대강국으로 도약하고 산업구조도 경쟁력을 갖추게 된다. 남북경제공동체도 실현될 전망이다. 사회면에선 전국민사회보험 등 복지사회의 기틀이 다져지고 환경관리도 선진화된다. 교육은 창의적인 전문교육 중심으로 개편되며 이를 통해 시민의식의 세계화도 촉진된다. 세계화는 45%가 목표수준이다. 정치 40%, 경제80%, 사회 30%, 문화 30%.

2단계인 2010년엔 선진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리고, 작고 유능한 기업가형 정부가 이루어진다. 지방분권체제도 정립된다. 경제규모는 세계 8강에 들어서고 기술집약 산업구조가 확립된다. 1인당 GNP는 2만5천달러로 예상된다. 남북간 정치 경제의 통합이 실현되며 세계중심국가로 기반이 마련된다. 세계정치경제기구에의 참여도 활발해진다. 정보사회의 기반이 마무리되고 복지 자율 정의사회가 이룩된다.

세계화수준은 75%로 잡았다. 경제에서 1백%를 비롯 정치 70%, 사회 60%, 문화 70%가 목표다.

'세계화지표'는 이러한 목표의 달성을 위한 수단별, 주체별 추진전략도 밝혔다. 세계화는 법제도, 인적자원, 집행운영, 의식관행 등 수단별 전략을 통해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 개인과 기업 정부가 함께 나설 때 달성할 수 있음을 밝힌 것이다.

법제도의 세계화는 WTO 등 세계기준에 맞게 국내법제도를 개혁하고 행정규제 등을 완화하는 쪽으로 방향이 제시됐다.

21세기 정보화사회에서 세계경쟁의 변수가 될 인적자원의 세계화는 각 개인의 자질을 높일 수 있고 전문인을 양성하는 쪽으로 정리됐고, 집행운영의 세계화는 행정조직의 개혁, 직위분류제 도입들이 구체적 방법으로 제기됐다. 또 의식관행의 세계화를 위해서는 세계시민교육을 통한 세계시민의식의 함양 등이 거론됐다.

주체별 전략으로는 시민의 자세변화, 기업의 능동적 변신, 효율적·기업가 정부의 세 방향에서 검토가 이루어졌다. 개인은 세계시민의식을 정립하고 국제정보 습득과 외국어훈련 등을 통해 세계경제발전에 기여하는 국민이라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표가 설정됐다. 기업은 시장개방의 확대에 맞서 경영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고 경영의 생산성과 유연성을 높여야 할 것 등이 주문됐다. 또 정부의존에서 벗어나 국내외 기업간 협업 등을 확대하고 기술개발에도 적극 나서줄 것이 요청됐다. 정부는 조직을 세계화하고 민간자율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것이 제시됐다. 또 국내법규관행 등도 세계기준에 맞춰 시급하게 정비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교육개혁 최우선 과제

'세계화지표'는 3단계 세계화목표 달성을 위한 최우선과제로 교육개혁을 꼽았다. 교육개혁이야말로 인적자원 중심의 세계화 발전전략의 요체를 이룬다는 것. 교육개혁은 인성교육과 전문교육으로 나누어지는데 인성교육은 세계시민,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열린 공동체를 이루는데 중점을 두고, 전문교육은 정보사회에 대응하는 교육으로 정보공동체의 주축이 되는 인재육성에 목표를 두고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면 지금 우리의 세계화수준은 어디쯤 와 있는가. '세계화지표'는 이미 밝혀진 국내외 연구결과를 토대로 한국의 세계화수준을 점검했다.

먼저 스위스 국제경영전략연구원(IMD)의 세계경쟁력평가를 보면 우리나라는 국내경쟁력 7위, 국제화 39위, 정부 30위, 금융 39위, 사회간접자본 29위, 기업경영 31위, 과학기술 18위, 인구 20위로 종합평가는 24위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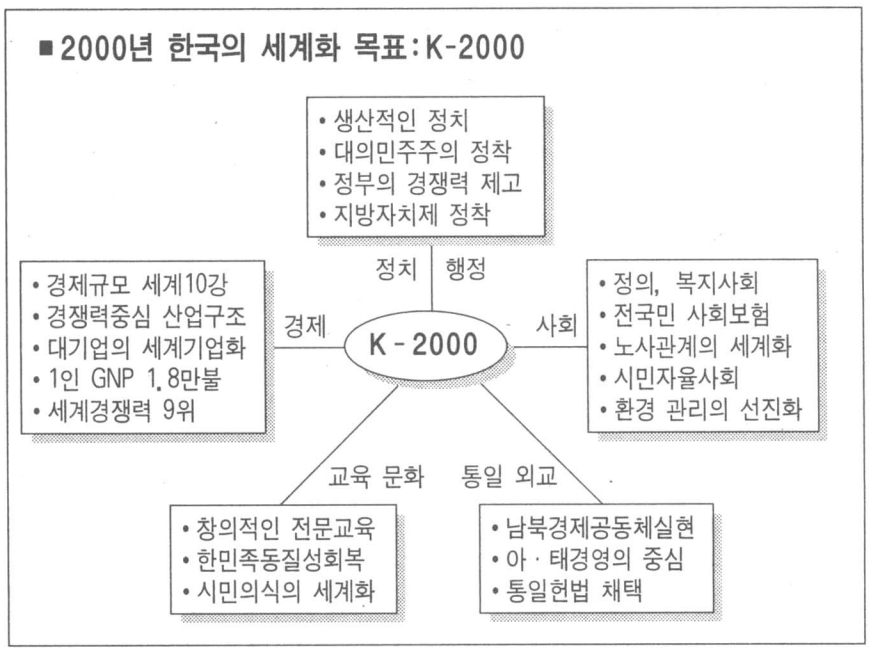
한국경제연구원의 국가경쟁력 평가도 IMD와 크게 다르지 않아 종합순위에서 29위로 평가하고 있다. 국내경쟁력이 22위, 국제화수준 40위, 정부 33위, 기업 32위, 금융환경 36위, 사회간접자본 30위, 과학기술 18위, 인적자본 23위, 노사관계 21위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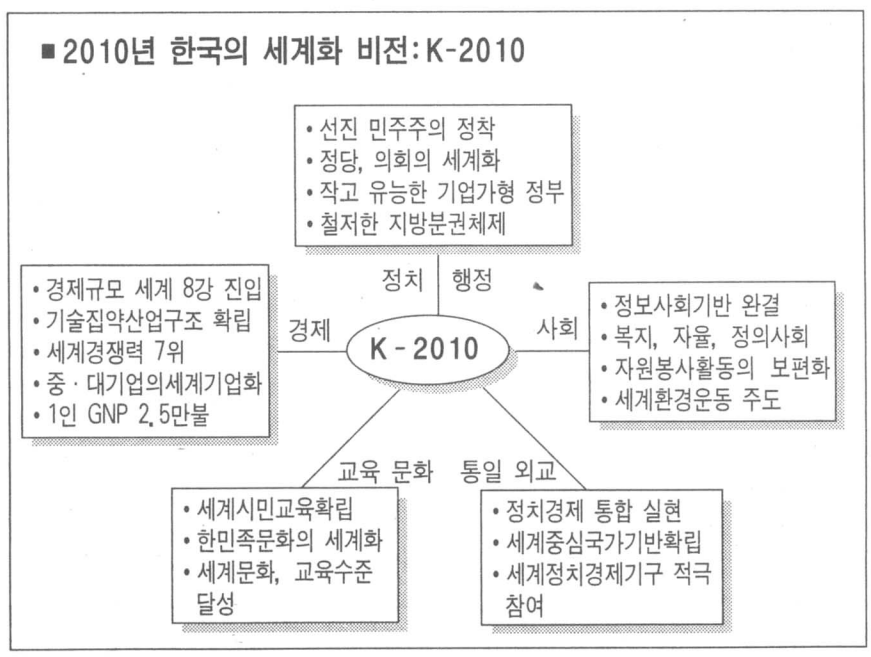
산업연구원(KIET)의 국가경쟁력 평가는 우리나라의 수준을 종합 15위로 평가했다. 국제화 17위, 사회간접자본 13위, 정책 16위, 정부재정 7위, 금융 13위 등이다.

이러한 종합적 현실진단 위에 정치·경제·사회·교육·문화 등으로 세분한 우리의 세계화 수준도 제시됐다.

먼저 정치부문을 보면 의회 정당 정치인의 자질, 정부부문 지방자치 등 전부문에 걸쳐 지극히 미미한 수준으로 드러났다. 특히 의회민주주의가 취약하고 정책바탕으로서의 기능이 약한 점 등이 지적됐다. 여성정치참여도 최하위로 밝혀졌다. 경제부문은 총 GNP가 세계 15위 1인당 GNP는 세계 38위로 나왔다. 산업부문은 조선이 2위, 철강이 5위, 자동차가 6위로 나타났다. 산업은 어느정도 세계와 가까운 수준에 있으나 농어업 등 1차산업분야는 크게 낙후된 것으로 밝혀졌다.

사회부문은 각종 환경지표가 세계수준에 크게 미달하는 한편 GNP대비 환경예산도 선진국의 20~50%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을 보여준다. 복지면에서도 평균수명 29위, 병상당인구수 43위, 인구당 의사비율 41위로 뒤처진 상황이다. 상수도보급률 26위, 주택보 ⤴





선진 7위권 진입

2010년 環태평양 중심국가

이뤄나가야 할 과제들을 찾아 추진하자는 의지로도 풀이된다.

그러므로 각 분야에 대한 '세계화지표'는 미래한국의 비전을 제시하는데 그치지 않고 지금 우리의 현실을 에누리없이 진단하고 그 반성의 토대 위에서 구체적 실천방안, 전략을 모색하는 데까지 나아갔다고 할 수 있다. 세계화를 위해 당장 시급한 것이 명확한 목표와 비전 그리고 그에 따르는 사회 전 주체의 일관된 실천의지라 할 때 '세계화지표'는 통일된 세계중심국가로의 21세기 한국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지형도라 할 만하다.

사실 따지자면 '세계화지표'는 이미 국민들의 가슴속에 내재되어 있던 새로운 세계환경에 따른 생존에의 위기의식, 국가미래에 대한 희망과 설계 등이 집약돼 가시화한 것이란 분석도 있다. '세계화지표'는 그런 국민 대다수의 인식의 심층을 들춰 구체적이고 명확한 수치로 드러내보임으로써 이제껏 막연히 품어온 세계화의 지평을 직접 실감할 수 있게 했다는 풀이다. 결국 '세계화지표'는 세계화의 명확한 목표를 제시하고 세계화가 모든 사회주체들이 자율적 역할을 다해야 이루어질 수 있음을 강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급률 27위로 사회기반시설도 세계수준에 미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문화의 세계화수준도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의무교육연한·대학교육 연구수준 등은 세계에 크게 미달되는 것으로 나왔다.

이를 종합한 현단계 우리의 세계화 수준은 세계5위를 기준으로 18%에 불과하다는 분석이다. 경제만이 40%로 비교적 높은 수치를 보였을 뿐 정치 5%, 사회 10%, 문화 15%로 평가됐다.

각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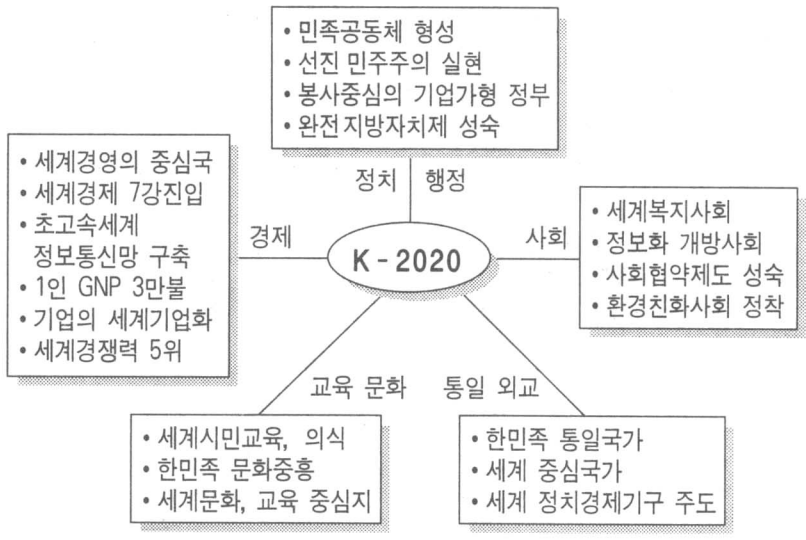
'세계화지표'는 각론으로 우리 정치·경제·사회·교육·문화의 세계화 수준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각 분야의 세계화비전을 제시했다.

경쟁적 민주정당체제 확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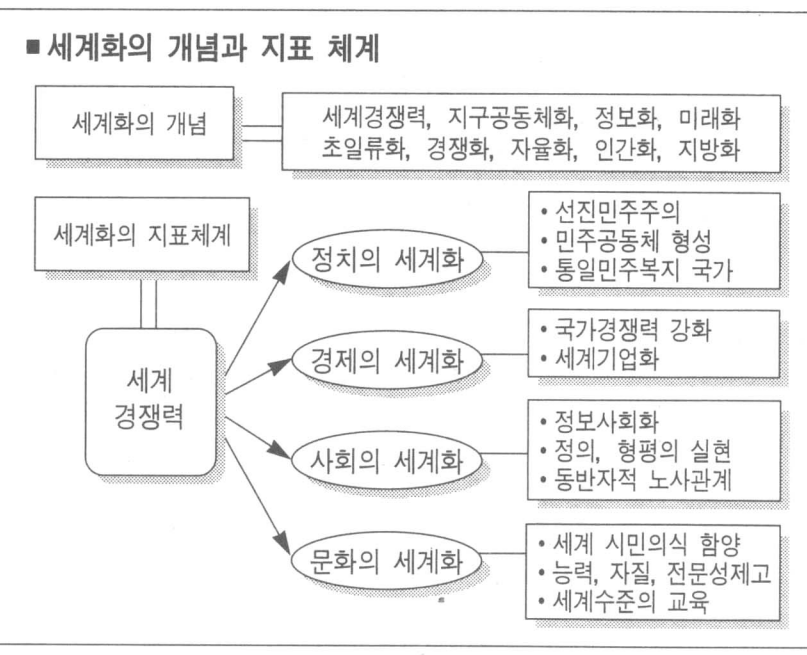
정치분야는 정치·행정·지방자치·외교·통일로 나눠진다. 먼저 정치의 세계화로 2000년 생산적인 정치, 2010 선진민주주의 정착, 2020년 민주공동체의 건설이 목표로 정해졌다. 단계적으로 경쟁적 민주정당체제를 확립하고 투명한 정치를 구현하는 등 선진의회제도를 정착시켜간다는 것.

행정의 세계화는 2000년 유능하고 작은 정부, 2020년 기업가적 정부로 목표가 세워졌다. 1단계는 행정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정부와 민간의 권한을 재조정하는 등 기능을 재편한다. 행정업무의 민영화도 확대하고 지방화도 본격 추진한다. 2단계에선 행정관리에서 행정경영으로 탈바꿈한 정부로 質위주의 행정이 이뤄진다. 전문 직업공무원제가 정착되고 여성의 공직비율도 크게 확대된다. 특히 21세기의 행정은 국민들에게는 최상의 공공서비스를 펼치고 기업에는 최적의 기업환경을 제공하는 경쟁력있는 행정으로 거듭 태어난다.

■ 2020년 한국의 세계화 비전: K-2020



■ 세계화의 개념과 지표 체계



지방의 세계화는 지방의 다양성 보장, 지방의 세계와의 교류, 철저한 지방분권체제 등 3단계로 설정됐다. 초기에는 지방의 발전과 성장잠재력 키우는데 주력하고 점차 지방의 국제교류활동을 보장하고, 해외에 지방기업체 전용공단을 조성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넓혀간다. 마지막 단계에는 철저한 지방분권체제로 지방정부가 지방의 경제개발 문화개발의 사업주체가 된다.

외교의 세계화는 통상외교의 확립과 세계정치경제기구 주도로 잡혔다. 여기에는 외교관의 질적 향상과 외교의 다변화, 민간외교의 강화 등이 모두 포함된다.

통일은 2000년 이전, 2000년에서 2010년, 2010년이후의 단·중·장기로 나눠 전망했다. 현재의 화해와 협력의 단계를 거쳐 2000년까지 사회경제적 통합을 이루고 2010년 정치적 통합이후 2020년 통일공화국을 수립한다는 것이다.

경제분야는 경제, 정보, 과학기술 등 세 부문으로 나눠진다.

경제의 세계화는 2000년 선진경제구조 진입, 2020년 세계경제 7강진입을 목표로 삼았다. 정부의 행정규제도 2000년 최소한으로 줄고 2020년엔 완전 철폐된다. 경제의 세계화를 통해선 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산업구조가 고도화되며 금융 조세제도의 선진화가 기대된다. 그러나 지속적인 성장으로 세계경제의 7강이 되기 위해서 대내의 직접투자확대와 무역상품구조를 고부가가치 상품을 중심으로 고도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보산업은 국가경쟁력을 이끄는 전략산업으로 2000년대 초고속정보통신망의 구축 등 2015년까지 45조2천여억원을 투입할 계획을 세웠다.

과학기술의 세계화는 2020년까지 세계과학기술대열의 선두라는 목표가 세워졌다.

2000년 기술선진국에 들어서는 것을 계기로 첨단기술산업의 생산과 시장점유율도 높여간다. 기술개발투자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과학 기술부문에 있어 우리나라는 현재 18위 정도에 머물고 있으나 산업구조와 기술의 고도화가 심화되면서 21세기초에는 기술선진국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측됐다.

사회분야는 환경·복지·노동·사회로 세분된다.

환경의 세계화는 2000년 환경의 선진화, 2020년 세계환경문제 해결에 대한 적극 참여로 방향이 정해졌다. 먼저 그린라운드 등 국제환경규제에 대비해 국내제도를 개선하고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 개편한다. 기업의 오염배출에 대한 규제강화 등 철저한 폐기물관리도 이뤄진다. 이를 바탕으로 전지구적 차원의 환경문제에 적극 참여해나간다.

복지의 세계화는 1단계 성숙한 복지사회의 기반을 마련하고, 2단계 더불어 사는 복지사회 구현으로 목표를 정했다. 2000년까지 남녀고용이 평등화되고 의료복지도 선진화한다. 공정한 소득분배가 이뤄진다. 저소득층과 노인 및 육아복지도 한층 나아진다. 복지재정도 대폭 확충된다. 2020년이후엔 복지사회가 이뤄져 세계복지실현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된다.

노동의 세계화는 2000년 인간다운 노동생활보장, 2020년 함께하는 노동생활보장을 목표로 민주적 노사관계 확립·근로기준의 세계화 등이 제시됐다. 근로자의 임금이 향상되고 남녀고용의 평등도 실현된다.

국토의 균형발전 완성

사회의 세계화는 국내적으로는 자율성·민주성이 확보되면서 고도정보화사회에 대비하고 안정된 생활을 구축하는 것으로 규정됐다. 나아가 세계적으로 열린 사회를 시현, 더불어 잘사는 지구공동체를 건설한다는 것으로 정해졌다. 2000년까지 선진자율사회가 정착된다.

질서·치안·생활환경 개선 등 전 부문에서 성숙된 시민사회의 기반이 갖춰진다. 2020년에는 물질적 풍요만이 아니라 인성이 중시되는 사회가 이룩된다. 최대가 아닌 최선을 추구하는 사회로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는 사회가 된다. 국토의 균형발전도 완성된다.

교육·문화분야는 교육·문화·의식으로 나뉜다. 교육의 세계화는 2000년 창조적 전인·전문인 교육의 실현을 거쳐 2020년 세계시민교육의 활성화로 목표가 정해졌다. 교육자율화, 학생당 교사수의 확충, 세계화에 맞는 교육의 실시 등을 통해 교육의 질이 높아진다. 또 2020년에는 중학의무교육이 실시된다. 대학의 수준도 세계 일류대학들과 어깨를 나란히할 수 있게 된다.

문화의 세계화는 단계별로 한민족문화의 창달과 중흥으로 세워졌다.

인식의 세계화는 세계적 시민의식화를 목표로 두고 우선 사고의 선진화를 꾀해간다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세계인과 더불어 사는 삶을 위한 의식의 다양화와 자율성이 고취된다.

徐光植기자

李洪九국무총리는 23일 낮 총리공관에서 각 부처 대표 서기관 및 사무관 19명과 첫 국정좌담회를 가졌다. 토론은 처음부터 활발하게 진행되었고 오찬시간중에도 참석자들은 그동안 느낀 것들을 거리낌없이 이야기했다. 예정시간보다도 1시간 가량 더 토론이 이어지는 등 시종 생동감 넘치는 분위기였다.

총리공관 국정좌담회

싱가포르 공무
참여의식·전문가 긍

'世界化' 국정을 놓고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공무원들의 토론 한마당이 펼쳐졌다. 중앙부처 중견공무원들이 국무총리에게 直言공세를 퍼부었다. 李洪九국무총리는 23일 과장급 10명과 사무관 9명과 첫 국정좌담회를 갖고 실무자들의 세계화에 대한 열띤 의견개진을 들었다.

토론

李총리 인사말 대통령께서 제창하신 世界化가 두달만에 전국민의 호응을 받아, 국민들 모두가 "뭔가 변화해야 한다"는 의식을 갖게 되었다. 이는 국민들이 그간 생각해왔던 인식들과 일치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행정부는 이제 부단한 자기개혁을 통해 世界化의 흐름을 이끌어나가야 하며, 급변하고 있는 世界化 조류에 맞추어 자세를 가다듬어야 할 시점에 와있다.

具昌德 법무부 출입관리국 기획과장 최근 세무비리사건 등으로 행정의 합법성이 지나치게 강조돼 합목적성 행정이 침해받을 우려가 있다.

예를 들면 외국인 불법체류자 처벌문제에 있어 감사관실에서는 "똑같은 한달 불법 체류에 대해 왜 벌금액이 서로 다르냐"고 지적하는데, 실제로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선별적이고 개별적인 처리가 더 합리적이라 할 수 있다. 이런 합목적 행정행위를 계속 통제하면 결국은 世界化에도 역행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李총리 최근 문제가 되었던 네팔인 근로자 처리문제의 경우에도, 단순히 법조문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정책목표를 어떻게 가장 합리적·능동적으로 실행시켜나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정책결정후 제도보완 잘돼야

曺泳起 국방부 행정관리담당관실 사무관 世界化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가 정책결정을 하면, 그에 따른 제도가 보완되어야 하며, 또 그것을 국민이 믿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외환보유한도액 확대에 관해 실제정책은 발표되었으나, 아직 제도가 뒤따르지 않고 있다는 언론보도를 보았다.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국민의 신뢰가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愼年晟 외무부 경제협력1과장 싱가포르 대사관 근무시 싱가포르 공무원의 다음 3가지 점에 대해 많은 감명을 받았다. 첫째 공무원이 국가경영의 참여자라는 의식, 둘째 국가경영의 전문가라는 긍지, 셋째 비리와는 무관하다는 자부심이 바로 그것이었다.

또한 싱가포르는 연금을 정부에서 전액 부담하는 대신, 비리적발시에는 연금을 박탈함으로써 공무원들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고 있다.

현재 우리과에서는 한국은행직원 1명을 파견받아 매우 큰 도움을 받고 있다. 정부기관에서 민간인들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규정을 만들어주기 바란다.

白泰鉉 통일원 통일정책실 사무관 정부가 사람을 키우는데 인색한 감이 있다. 해외연수, 해외파견근무를 더욱 확대해야겠다. 각분야 주재관도 증원되어야겠다. 통일원의 경우 중국·일본·독일 등에 해외주재관을 파견, 북한에 대한 실증적 정보를 입수함으로써 좀더 내실있는 대북정책수립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柳成葉 내무부 지방기획실 사무관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는 중앙집권적 인식이나 발상의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지방정부를 행정의 파트너로 인식하여 중앙정부의 권한과 사무를 과감히 지방으로 이양하고, 재정확충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로 인해 지역·집단·이기주의가 빈발할 우려가 있으므로 내무부뿐 아니라 전중앙부처가 머리를 맞대고 국정통합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李총리 지방자치단체 선거에서는 정치의 속성상 지방자치가 가져오는 혜택만 강조할 뿐,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국민들에 대한 부담, 새로운 의무는 거론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각 부처에서는 지방자치에 따라 예상되는 각종 문제점들을 추출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국민들에 대한 계몽활동도 준비해야 할 것이다.

元容起 문체부 문화산업기획과 사무관 世界化와 관련 사무관급 이하 실무직원들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世界化냐"에 대한 체득화된 개념정립이 미흡한 것 같다.

공식적 채널을 통해 世界化를 위한 개선이 이뤄지는 데는 한계가 있다. 실제 실무 직원들의 생활 그 자체에서 世界化 실천 방안이 모색돼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예를 들면, 같이 일하는 7급직원이 총무처주관 어학코스에 나가고 있는데, 내경우 윗사람 눈치보지 말고 빨리 교육받으러 갈 것을 먼저 권하고 있다. 직원들이 어학교육을 제대로 받게하는 것, 이러한 것이 바로 世界化 실천의 첫걸음이라 생각한다.

지구촌 가족 모두가 같이 살아간다는 의미에서 '우리는 세계로, 세계는 한국으로, 우리 모두는 미래로'라는 캐치프레이즈를 생각해보았다.

韓春求 정보통신부 기획예산담당관 世界化의 추진과정에서 '정보화 부문'은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투자가 선진국에 비해 극히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깨끗하고 투명한 정부를 만든다는 차원에서도 행정전산화가 필수적이나 전산화가 자신의 권한을 빼앗아간다는 위기의식 때문에 잘 추진되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 범국가적·정부적 차원에서 과감한 투자와 적극적 협조가 필요하다.

지방화를 위해서는 지역균형개발이 선결요건이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재정자립도가 높은 과천과 그렇지 못한 안양·의왕 등을 광역화하여 통합함으로써 재정자립도를 높여나가는 등의 '재정자립도를 고려한 시·군통합'이 추진되었으면 한다.

李총리 정보화는 21세기로 가는 프론티어라는 인식을 갖고 우리 모두 이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민간부문의 사례를 참고할 수도 있을 것이다. 총리 스스로도 모범을 보여 정부 전산망을 적극 활용하는 등, 정부의 정보화를 위한 변화를 시도할 생각이다.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중요

鄭碩九 교육부 대학교육정책관실 서기관 공직사회에서는 '조국 근대화'에서부터 '世界化·지방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캐치프레이즈가 있어왔다. 그러나 공직자들이 열과 성을 다해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실현 가능한 것이다. 그렇지 못한 경우 일과성 구호에 그치게 될 우려가 있다.

교육개혁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일선 교육현장문제, 정책의 일관성문제 등 제반요인을 고려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추진돼야 한다. 개혁정책의 정착을 위한 구체적 시책, 예컨대 교육재정의 GNP대비 5% 확충 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예산·인사문제 부처자율에

韓鉉珪 건설교통부 기획예산 담당관 지금까지의 공무원은 역사창조의 중심에 있었으나 지금은 그 자리에서 밀려나고 있다. 국민을 리드해나가는 주체의 입장에서 객체로 바뀌었다.

世界化를 위해 무엇을 끌고나가야 할 것인가보다 이제는 사회의 한 부문으로서 자체 생산성을 높여나가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를 위해 관료사회의 불신의 벽을 허물어야 한다. 공무원이 민간을 불신하고, 부처 상호간에 불신하고, 감사원이 부처를 불신하고, 관리자가 하급자를 불신하는 현상황에서는 생산성 향상을 기하기 어렵다.

관료사회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예산, 인사문제를 시범적으로 과감하게 부처에 맡겨, 총액으로 부처에 예산을 배정하고 과장급 이하의 조직 및 인사는 부처가 독자적으로 하도록 하는 시도가 있었으면 한다.

申名 노동부 부녀소년과장 공무원 생활을 시작하던 60년대말 당시에는 공직을 명예로운 일로 생각했으나 최근 일련의 사건 등으로 인해 지금은 공무원이라고 얘기하기도 부끄러운 상황이다.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일이 이제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이를 위해 우리의 눈높이를 국민 각자에 맞춰나가는 노력을

21세기에 대한 꿈과 비전, 희망을 가지고 전문적·구체적 전략을 가져야 우리 개혁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 李洪九총리

원을 배우자
공지·청렴 자부심

야 한다. 공무원들이 국민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자긍심을 가지고 스스로 弘익의 要員이 되어야 한다.

여성의 목소리가 정책결정과정에 반영되었으면 한다. 쓰레기 종량제의 경우에 주부의 입장이 잘 반영되지 않아 시행상에서 다소의 혼란이 있었던 사례도 있다.

李총리 맺음말 정부가 이룩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정부'이다. 따라서 공직사회의 비리와 부정은 국민불신의 원천이 되고 있는 상황임을 인식, 우리의 자세를 가다듬어나가야 하겠다.

오늘 토론에서 전문화의 중요성이 여러번 강조되었는데, 국무회의시에도 언급했지만 지난번 개각에 대해 국민들이 좋은 평가를 내리는 것은 바로 그 구성원이 전문가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장인정신·프로정신이 공무원 사회의 밑바탕이 되어야 한다.

또한 자율성을 정책방향의 하나로 삼아 권한의 하부이양을 통해 책임지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나가야 할 것이다.

정부는 국민생활의 안정·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미래지향적인 사고를 가지고 지속적인 개혁을 추진하여 '世界化'를 향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

참석소감

元 容 起 문화체육부 문화산업기획과 사무관

거리낌없고… 생동감 넘치고…
공직사회 변화의 바람 實感

1995년 1월23일 그날은 나에게는 아주 이례적으로 가슴 설레던 날로 기억되고 있다. 그때의 경험은 어렸을 때 강원도 촌놈이 처음 서울을 방문할 때 느꼈던 설렘과 같았다고나 할까. 그때의 따끈따끈한 느낌이 식기 전에 또한 그 분위기가 사라지기 전에 몇자 글로 적어보고자 한다. 그날은 '세계화·지방화 시대의 공직자상'이란 주제로 국무총리와 중앙부처 4·5급직원 20여명이 한자리에 모여 이야기를 나눈 날이자 개인적으로는 처음으로 총리공관을 방문한 날이었다.

간담회가 시작될 때 총리께서는 그동안 총리생활 1개월이 지난 지금 국무회의 등을 통하여 각부처 장관님들의 의견은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았지만 날마다 현장에서 뛰고 있는 우리정부 중견직원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었기에 기탄없이 이야기해달라는 부탁의 말씀과 함께, 항상 이와 유사한 모임을 주재해보면 처음에는 이야기들을 잘 하지 않다가 회의가 끝날 시간이면 토론이 활발해진다는 말씀을 하셨다.

그러나 토론은 처음부터 아주 활발하게 진행되었고 오찬시간중에도 참석자들은 각자 그동안 느끼고 생각하였던 것들을 기탄없이 이야기하였으며, 예정시간보다도 1시간 가량 더 토론이 진행되는 생동감있는 분위기였다.

세계화는 '변화의 철학'이자 '변화의 실천', '변화의 생활'이 되어야 한다고 평소 생각하고 있다. 세계는 지금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다. 이와 같은 변화는 가히 '소용돌이의 장(Turbulent field)'에 비유될 수 있다. 세계화는 다름아닌 이와같은 변화의 물결에 대응하고 적극적으로는 변화의 물결을 주도해 나가는 개념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모두 변해야 한다. 기존의 생각과 사고의 틀로서는 변화하는 세계의 주인이 될 수 없다. 각자 자기의 주어진 위치에서 무엇인가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세계화가 아닌가 생각한다. 이 좌담회가 이루어진 것에서부터 또한 총리에 대한 첫인상에서부터 나는 공직사회에 불고 있는 변화의 바람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한가지 희망적인 것은 요즘 소위 신세대 공무원들 사이에서 술한잔 할 때 오고가는 이야기들 속에서도 변화의 바람이 일고 있는 것을 볼 때, 이러한 변화를 희구하는 움직임들은 우리 공직사회의 큰 발전의 원동력이 되리라 기대해 본다.

그러면서 나 자신은 젊은 공무원들로부터는 신세대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아가 지긋하신 분들로부터는 신세대 공무원답지 않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변화를 희구하면서도 조직 사회 내부의 변화에 대한 저항의 관성 때문에 과감하게 행동으로 못옮기는 주변인(Marginal man)으로서 겪는 갈등을 느끼고 있다.

요즈음 나는 중간 관리자로서 어떻게 하면 '변화의 생활' 행동으로 옮길 수 있을까하는 실천방안 모색하고 있다.

아침식사를 챙겨주는 아내와 곤히 잠들어 있는 어린 두딸을 뒤로하고 이른 아침 출근하는 나는 세계화야말로 나의 두딸이 이다음 자라 지구촌 한가족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주는 것이란 즐거운 마음으로 오늘도 어김없이 내 책상위의, 내가 가장 아끼는 컴퓨터를 켠다. ■

찬대화

鎭 환경부 폐기물 정책과 사무관 세계적으로 다국적 기업을 중심으로 기준을 강화하는 경향이다. 우리나라 이러한 경향에 능동적으로 변화하여 기준 규제를 강화할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의 환경행정은 환경사고의 뒷에 치우친 경향이 있었다. 현안사항 해결에 매달리다보니 환경정책의 전체 방향과 목표 등에 대한 신중하고 충분 정책적 노력이 부족하였다. 앞으로 이 측면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처를 수 있도록 조직체계가 정비되어야 한

리 앞으로 환경업무가 지방화될 경 업무분장 문제와 권한배분 문제가 대 것이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연구대 필요하다.

植 보건복지부 의료관리과장 앞으 행정은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 정책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지금까 경제성장에 우선하다보니 사회복지에 소홀한 경향이었다. 이제부터는 하고 자립능력없는 계층에 대해 정부 적극 개입, 지원하여 국민전체의 삶의 향상시키는 것이 가장 큰 현안사항 될 것이다.

간부문의 윤리성 제고와 자율성 신 통해 가능한 영역의 민간부문으로의 이 되어야 한다.

奎 과기처 기획총괄과장 정부의 경 제고는 단일 부처의 힘만으로는 어므로 산하단체까지 포함 전부처가 함 력해야 한다.

적교류 활성화 없이 정부 경쟁력 제 어렵다. 각 부처별 특정업무분야에 교류를 제도화하고, 특수법인 등 산 체별 교류제도화도 꼭 필요하다.

성찰 발전 기회 제공을

炫 공보처 여론과 사무관 世界化의 속에는 ▲일류화 ▲밖을 보고 밖으로 나가는 것 ▲열린 생각을 갖는 것 등이 포함될 것이다.

정부는 이미 조직개편을 통해 변화하고 있으나 내무관리측면에서 과감한 경영혁신이 필요하다. 지자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면 지방자치단체는 경영혁신기법을 채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공무원의 개혁·경영혁신을 추진하기 위한 전담부서가 있어야 한다. 어느 조직이든 구성원의 5~10% 정도가 먼저 변화하면 조직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단지 이 경영 혁신은 각 부처별로 자율적으로 결정, 추진되어야 한다.

세계화는 희망과 비전을 주는 개혁이 되어야 한다. 특히 '안식년제의 채택' 등은 공무원의 자기성찰과 발전을 위한 기회제공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행정부내 구성원인 내부고객의 만족을 시켜야 업무의 생산성도 제고될 것이다.

金準東 통상산업부 산업배치과 사무관 공무원집단을 매도하고 평가절하하는 '정부미'라는 용어에 반감을 갖고 있다. '정부미라는 말을 듣지 않도록 개인적으로 다양한 변화와 경험을 해보고 있다.

공무원은 자기일에 대해서 만큼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정부는 공무원들이 일류공무원이 돼 최상의 공공서비스를 베풀 수 있도록 여건조성에 노력해주기 바란다.

무뚝뚝한 태도 바뀌어야

朴玄出 농림수산부 행정관리담당관 世界化에 대해 우리 국민이 올바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흔히 외국인들은 한국인을 무뚝뚝하고 접근이 어렵다고 말하고 있는데 앞으로 가까운 사람뿐만 아니고 멀리 있는 사람에게도 정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선진국에 비해 도농간 격차가 너무 큰 편이다. 앞으로 농림수산부에서는 지방에서 자조적·창의적으로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업무추진방식을 변화시킨다면 해당 시·군의 전적인 재량에 의해 세계 일류화를 추진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韓承熹 재경원 종합정책과 서기관 世界化는 열린세계로 합류해나가는 과정이다. 지금까지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시점임을 전체적 시각에서 봐야 한다. 따라서 열린 세계의 수준으로 개혁해나가야 한다.

행정은 수요자 국민을 위한 행정으로 바뀌어야 하며 민간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개혁되어야 한다.

金相仁 총무처 조직기획과 사무관 자율화·개방화·규제철폐 등 제도개선 등의 이면에 있는 책임문제와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부문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우리 스스로 역량을 키우고 업무에 대한 책임을 지는 자세가 필요하다.

元珍植 총무처 차관 국민 각자가 각 부문에서 최선을 다하고 공무원 개개인 모두가 주어진 업무를 충실히 하는 것이 世界化라고 할 수 있다.

康奉均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장 우리모두 프로가 되려는 정신무장이 더욱 요구된다. 각 분야와 전체를 함께보는 균형된 시각이 필요하다.

李총리 우리가 世界化를 추진하는 것은 화목하고 잘살기 위해서이다. 능률만을 강조하다보면 우리 정신과 문화를 소홀히 할 수 있을 것이므로 정신·문화적 측면에서도 충분한 고려가 있어야 될 것이다. 특히 불우이웃이나 노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와 농촌문제 등 이웃이 함께 잘살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배려해야 할 것이다.

21세기에 대한 꿈과 비전, 희망을 가지고 전문성과 구체적 전략을 가져야 우리 개혁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로서도 최선을 다하겠다.

오늘 모임이 기폭제가 되어 世界化에 대해 함께 상의·토론하는 풍토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 ■

정리 :총리공보비서실

세계화추진 특별연찬회 강연 요지

文明史的 변혁과 국가공무원의 개혁

金鎭炫 세계화추진委 공동위원장

개방 · 차별 · 자동화 시대

현시대는 탈근대 · 초근대 · 근대후기라고 불리는 대변혁의 시대이다. 존 루 칵스 교수의 '20세기의 끝남은 바로 1천5백년부터 시작된 근대가 끝났다'라는 주장과 엘빈 토플러, 존 네이비스트 등의 인류화 · 지구촌화 · 정보화 · 지식화 · 자동화시대의 도래 예언 등도 이를 잘 설명하고 있다.

새 문명사의 변화는 개방화, 지구촌화, 개성화 및 차별화, 자동화 등이 동시에 밀도있게 추진될 것이다. 또 초강대국 대신 국제기구나 세계기구가, 국가의 주권보다는 인권 · 민권 · 자연권 · 부족권 등의 역할이 더 커질 것이다.

스위스型 質的 선진국 목표

韓國의 비전과 목표는 첫째, 質과 格의 선진국이어야 한다. 美 · 日 · 러시아형의 量이 아니고 스위스 · 스웨덴형의 質적인 선진국이 되어야 한다.

둘째, 평화와 지구촌화의 중심이 되는 국가여야 한다. 韓國은 인구, 자원, 에너지, 환경 등 인류의 공통문제를 가장 많이 안고 있는 東北亞의 핵심지역에 속하고 있다. 이 문제의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

외침의 경험이 전혀없는 韓國은 세계에 폭력적이고 잔인한 국가로 비치고, 전범인 日本이나 中國은 오히려 평화적이고 인화적인 국가로 보이는 것은 바로 우리의 세계화 · 지구촌화 · 인류화의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특수성과 보편성의 調和

새시대를 열기 위한 개혁의 첫과제는 4대강국과 겨룰 수 있는 일등 · 일류의 능력배양이다.

둘째, 質과 格을 갖춘 선진국이어야 한다. 정치와 안보의 비용이 싸면서 효율적인 개혁이어야 한다. 도덕적이고 절약하는 시민과 공동체를 형성하고 소수정예로 세계적 경쟁력을 키우고 세계를 향하는 원초적이고 원형적 가치를 發信할 수 있는 신념과 철학을 갖추도록 개혁해야 한다.

셋째, 평화와 지구촌화의 중심이 되는 개혁이어야 한다. 우리 사회공동체가 평화지향적이어야 하며 세계공통문제群적 성격일수록 안의 특수성과 밖의 보편성과의 융화, 조화, 일체화 등에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시대淸算의 고리를 풀자

개혁의 참다운 출발은 참다운 '참회'에서 출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자신의 과오를 도덕적으로 반성하고 새로운 인격, 새로운 공동체로 '부활'하는 그런 개혁이 필요하다. 韓國의 지도자나 공직자들은 시대청산을 반드시 옳게 하고 넘어가야 한다.

새 역사를 여는 韓國의 개혁은 안으로의 참회와 시대청산의 고리가 풀려야만 대장정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큰 계기를 마련하면서 부국강병에서 정보문화 선진국, 평화창조의 국격 높은 나라로 국시와 비전을 바꾸어야 한다.

관료중심으로 정책 주도해야

우선 나라의 중심이 개인이나 군부가 아닌 관료가 되어야 한다. 관료가 중심이 되어 국민정서를 대표하는 정책을 주도해야만 한다. 단순히 부의 기능만을 집행하는 기능적 역할에 그치지 말고 韓國을 지키는 중심이라는 자각을 가져야만 하는 것이다.

둘째, 새세계 · 새시대 · 새문명의 전환기에 서야할 공무원의 위치를 확립해야만 한다.

역사전환의 궁극적 방향을 거스르려는 생각이나 기도는 하지 말아야 한다. 공무원들은 민족통일, 근대국가완성 등과 같은 우리 민족의 원초적 요구사항을 팽개치거나 잊지말고 풀어나가야 한다. 권력적 · 패권적 · 물리적 방식에만 의존하지 말고 성장하는 근대이후의 시민(Civilian)축을 더욱 활용하는 방식이어야 한다.

NGO(비정부기관)등 시민축의 성장이 국가 또는 사회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시민축이 성장함에 따라 애매모호성과 축내부의 분쟁가능성이 야기될 가능성이 있다. 이것은 세계화의 또다른 진행과 더불어 보편적 표준, 공준, 규칙 등으로 풀어야 되는데 이것 역시 엘리트 공무원이 해야 할 일이다.

행정의 능률화 · 투명성 제고

국가의 개혁목표와 공무원의 새위치에 맞추어 본 관료사회의 개혁은 다음과 같다.

▲韓國관료의 능력이 4대강국의 능력보다 우수해야 하며 ▲더욱 전문적이고 다차원적인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韓國의 공무원이면서 국제기구 · 세계공동체의 공무원이 될 수 있는 자질 즉 언어, 외국인 다루기, 국제정세이해 등의 능력을 개척해야 한다. ▲행정의 투명성 · 공개성이 높아져야 한다. ▲세계사를 보는 안목과 韓國의 비전을 성실히 제시하여 훌륭한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한다. ▲부처기능을 가급적 통합해서 부처수와 관료수를 더 줄여야 한다. ▲정보기술과 정보문화 확산을 통하여 관료행정 기능의 능률화, 인원축소,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 멀티미디어의 전개로 이것은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

12개 중점 추진과제

창의성 · 人性중시 교육개혁 최우선
全지구적 차원으로 의식확대 추구

세계화추진委 민관 합동의 세계화추진위원회가 지난 21일 첫회의를 열고 각분야의 12개 중점추진과제를 내놓았다. 이로써 미래지향적 제2단계 개혁인 세계화의 추진이 본격화된 느낌이다.

"민간주도" 정부입장 보여

정부는 세계화가 성공하기 위해선 먼저 '세계화構想'의 수립 · 결정 · 집행과정에 국민 각계의 폭넓은 참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하고, 각계와의 협의를 통해 세계화에 대한 인식과 공감대가 확산될 수 있도록 그 추진체계를 마련키로 했다. 이번 회의에서 추진위 운영방향에 관한 논의 등을 민간위원장인 金鎭炫 前과기처 장관이 도맡아 추진하기로 한 것은 세계화를 민간주도로 이루어 나가겠다는 정부입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통해 세계화의 의의와 기본방향을 ▲'세계일류'지향 ▲세계질서 형성에의 주도적 참여▲인류의 보편적 가치추구와 실현 등 세가지로 압축, 정리했다.

세계일류를 지향한다함은 정치 · 경제 · 행정 · 외교 · 교육 · 언론 · 문화 등 각분야를 세계적 수준으로 향상시키고 개인 · 가정 · 기업 · 정부 등 각 주체가 세계화를 지향하는 의식과 역량을 길러 '오늘의 문제', '우리의 문제'를 세계적인 안목과 시각에서 해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 외부적으로 주어진 질서에 적응하는 개방화와 우리 국내의 법률과 제도를 국제사회에 맞추어가는 국제화의 소극성을 지양하고 국제경쟁력 강화와 창의력을 살려 세계질서 형성과정에서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바꾸어 말하면 '우물안 개구리式'의 인식과 활동양식을 탈피, 세계를 바로 바라보는 넓은 안목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인류의 문제 함께 고민

내나라, 내민족만 잘살면 그만이라는 이기주의적 자세에서 벗어나 환경 · 핵 · AIDS · 인권 등 전인류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겠다는 인식을 확산시켜 세계와 더불어 잘사는 인류공영과 지구공동체를 만드는데 앞장선다는 것이다.

추진위는 특히 이날 선정과제 중 근본적인 제도개혁이 필요하고 다른 부분에 파급효과가 크며 사회 각계각층과 정부 여러부처의 의견수렴 및 협조가 필요한 주요과제 12개를 간추려 중점추진과제로 삼았다.

▲창의성과 인성이 중시되는 교육개혁 ▲노사제도 및 관행의 세계화 ▲경제환경변화에 대응한 巨視 및 산업정책개선 ▲미래산업구조에 대응한 산업인력 양성체제 개혁 ▲사회 각 분야의 정보화 촉진방향 ▲地自制하의 지역균형발전 추진 ▲21세기 환경비전과 추진방향 ▲시민정치의식의 세계화 방안 등이다.

또 ▲세계화를 위한 언론의 역할▲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방안 ▲외국어 교육 강화방안 ▲한국의 이미지제고를 위한 사업 추진방안 등도 포함되었다.

최우선과제인 교육개혁은 세계화시대에 적합한 능력과 인성을 갖춘 생산적이고 공동체 지향적인 차세대를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소모적인 교육에서 생산적인 교육으로의 변신을 꾀하려는 것이다.

세계경영의 중심국가로 성장하고 그에 걸맞는 역할을 수행, 관리하기 위해선 개개인의 의식과 행동반경을 全지구적 차원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판단에 근거하여 산업인력양성에 정부가 보다 더 적극적인 태도를 견지해나갈 방침이다.

연말까지 70개 과제 선정

언론 또한 세계를 통찰하는 시각에서 신속 · 정확 · 완전한 언론으로 탈바꿈해야 한다.

李洪九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세계화추진위는 모양을 갖추려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역사인식과 국민의 뜻을 바탕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지속적인 개혁을 추진해나가는 모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계화위원회는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20개분야 70개 과제를 선정하여 연말까지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 21세기를 겨냥한 장기적 국가전략을 세우기로 했다.

과제 추진의 총괄은 위원회가 맡기로 하고 정부차원의 실무적 뒷받침은 총리행조실장을 단장으로 한 '세계화추진기획단'에서 맡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 각 부처도 민간인을 포함, '세계화추진기획단'을 자율적으로 편성하여 추진위의 활동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崔 江기자

인터뷰

康奉均 세계화추진기획단장

地球村변화 대응 지도이념은 世界化뿐

지난달 25일 金泳三대통령은 "세계화란 21세기 통일된 세계중심국가를 이룩하기 위한 국가발전전략이며 차세대를 위한 개혁구상이라고 언급하고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세계화추진 6대과제를 제시했다. 이로써 그동안 있어왔던 세계화개념에 대한 추상적인 논의가 끝을 맺고 행동단계로 돌입했다. 세계화추진에 대한 실무적 책임을 담당하게 될 康奉均 세계화추진기획단장을 만나 세계화에 대한 배경과 세계화 작업의 추진체계, 주요 작업 내용 등에 대해 들어봤다.

-'세계화'를 국정지표로 선정한 배경은 무엇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근대 국가발전의 역사적 흐름을 살펴보면 60~80년대까지는 6차에 걸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성공이 산업근대화로 이루어져 불과 30년 전까지만 해도 GNP 100달러였던 것이 지금은 1만달러에 이르는 발전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때 국민을 이끈 지도이념은 조국의 근대화, 한마디로 '잘살아 보자'는 것이었지요. 그러나 경제적인 발전만이 아닌 정치적 민주화를 염원했던 많은 국민들의 노력의 결실은 문민정부의 탄생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문민정부에 와서 정치민주화가 성공되었지요. 21세기를 맞아 우리에게는 두가지의 당면 문제가 생겼습니다. 외부적으로는 급변하는 지구촌의 변화에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국경없는 경쟁시대와 정보화시대 속을 과연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과거 고도성장 아래서 파생되었던 모순을 고쳐 국민이 단결해야만 세계중심국가가 되는 원동력이 나옵니다. 동시에 경제·사회법질서·정치 등 모든 영역에서의 규칙이 바로 세워져야 합니다. 경제발전에 미치지 못하는 문화·의식수준을 끌어올려 불균형을 해소해야 하는 것입니다. 안으로는 대기업집중의 불균형적인 산업구조와 수도권의 지나친 비대 등으로 야기된 계층·지역·부문간 불균형을 해소해야 합니다. 이러한 내·외적인 문제점들을 해결할 지도이념은 세계화 밖에 없다는 결론입니다.

사생활까지 세계적으로 통합

-21세기 지구촌 변화의 특징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들을 수 있습니까?

▲20세기가 산업화, 근대화 추구라는 물질적인 풍요에 최우선의 가치를 둔 시대였다면 21세기는 정보화·인간화라는 특징을 갖습니다. 즉 좋은 환경, 높은 문화 수준, 세계와의 교류 등을 통해 인간 삶 전체의 풍요로움에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촉진시킨 것은 이념대립의 냉전시대가 종말을 고하고 세계가 자유경쟁체제, 자유민주사회로 통합되어 서로 의존하고 경쟁하는 시대로 변했고, 항공·통신의 발달로 국경과 거리의 장벽 또한 무너진 것이라 할 수 있지요. 한마디로 기업활동은 물론 개인의 사생활까지 세계의 모든 정보가 공유되는 시간적, 공간적 통합이 이루어졌다고나 할까요. 게다가 물질적으로 풍요해짐에 따라 가치관이 또한 다양해졌구요.

-세계화와 국제화의 차이점, 또 '신한국'과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세계화는 新한국건설과 일치

▲국제화란 20세기 근대화 시대의 중심개념이고 세계화는 21세기 지구촌 시대의 중심개념입니다. 무역, 투자간 확대에 중심을 두던 것이 문화 등의 총체적 교류로 확대되고 있으며 후진국사이에 유행하던 무조건적인 '선진국 모방주의'가 사라지고 고유의 문화나 그들만의 장점을 살리는 독창주의, 창조주의가 중시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지원아래 행해지던 해외진출 전략이 기업은 기업끼리, 단체는 단체끼리, 개인은 개인끼리라는 교류주체의 다양성이 돋보입니다.

일부 계층만의 참여로는
통일된 세계중심국가 형성이 어렵다
전계층을 감싸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잘 알다시피 신한국건설이란 과거 급속한 경제개발에서 생겨난 병폐, 권위주의의 모순 등 '한국병'을 치유하여 골고루 잘사는 사회를 만들려는 의지가 아니었습니까?

기본적으로 세계화가 추구하는 것이 국민이 어디를 나가서도 부끄럽지 않고 당당하고 성숙한 국민像, 기업像을 만드는 것이라고 할 때 新한국의 건설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세계화의 배경에 대해 말씀해주셨는데 이제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마련된 세계화추진위원회의 역할에 대하여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세계화가 정부만 잘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인식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각계각층의 최고의 지성인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만들어 각 과제를 책임지고 있는 장관들과 함께 그들의 체계적인 지식과 경험을 보태 더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전략을 짜려는 것이지요.

- 각부처가 추진하려는 세계화 과제의 종합조정 방식은 무엇입니까?

▲우선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밝힌 각부처의 세계화 업무계획이 기본목표 전략과 일치하는가를 논의합니다. 그다음 각 부처 스스로가 하기 어려운 개혁과제에 대해서 기본방향을 설정해주고 각 부처로 하여금 실천계획을 세우도록 하는 것입니다. 부처와 위원회는 상호 연계되는 방식이 될 것입니다.

紳士道를 갖춘 국민이 되자

- 지난달 25일 대통령께서 발표하신 세계화 구상의 6대 핵심과제의 추진방향은 무엇입니까?

▲첫번째는 교육입니다. 세계화가 인간주의를 토대로 하고 있는 만큼 교육이 달라져야 합니다. 입시경쟁위주의 교육폐단은 이미 널리 인식되고 있습니다. 교육의 기본방향을 인성교육과 창의성 개발로 전환해야 하는 것이지요. 또한 빠르게 변화하는 정보화 시대에는 학교교육만으로는 부족한 때이지요. 따라서 모든 교육체제가 평생교육체제로 변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법 경제제도의 개혁입니다. 우선 경제제도가 공정성·투명성·합리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아야 하겠죠. 특히 금융·세제·외환제도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법을 잘지키지 않았던 노사관계의 질서를 확립하여 산업평화를 유지할 것입니다. 셋째, 행정개혁으로 기업가적인 서비스 중심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규제는 줄이고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능률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지자제의 본격화가 세계화의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라 세계화를 가속시키는 쪽으로 유도할 방침입니다.

넷째, 정치·언론의 세계화입니다. 정치는 민주적이고 생산적인 미래지향적 정치문화를 창조하는 것이고, 언론은 바로 알리고 사회의 통합기능이 창달되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분야의 지도층이 솔선수범하지 않는 한 매우 어렵고 조심스러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섯째는 환경보호로 세계가 '환경파괴'에서 '환경친화'로 변화하는 것만큼 우리의 생산·소비방식을 변화하는 방향에 맞추어가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의식과 관행을 합리화하고 질서를 생활화하여 선진사회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즉 '신사도'를 갖춘 국민이 되자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또한 민간단체가 중심이 되어 시민자율운동으로 활발히 전개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계화추진기획단이 기본적으로 하는 일이란 무엇입니까?

▲첫째는 위원회가 세계화 과제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 부처에 관련된 문제를 조정하는 기능도 하지요.

- 각 부처간의 주요 정책 조정방식은 무엇입니까?

▲많은 실무회의가 선행되어야 하겠고 과제 우선순위에 대한 부처이기주의와 영역싸움에 대한 견해를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겠죠. 결국 각 부처보다는 기획단에서 세계화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전체적인 차원에서의 설득과 타협은 물론 따질 것은 따지는 그런 형태가 되어야겠지요.

- 기획단의 작업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2월부터 구체적인 작업을 실시할 겁니다. 상반기중 주요과제에 대한 처방을 마련하고 하반기에는 일선 행정 국민 각자에게까지 세계화가 스며들도록 할 것입니다.

최선 다하면 반드시 대가받게

- 세계화의 구체적인 작업에 대한 여론 수렴 방식은 무엇입니까?

▲각 부처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기획단은 관련전문가 또는 민간인을 총망라할 것입니다. 또 추진위에서 하는 일은 원칙적으로 공개주의를 택하고 있는 만큼 언론이나 국민들의 직접적인 비판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위원회에 참여는 안했지만 관심이 많은 분들과의 폭넓은 대화도 계속 가질 것입니다.

- 세계화 추진이 국민들에게 주는 혜택은 무엇입니까?

▲국민들은 장래에 대한 꿈보다는 꿈이 어떻게 실천되느냐에 관심이 많을 겁니다. 결과가 언제 어떻게 피부에 와닿느냐하는 것에 대한 관심말이죠. 지금까지의 국가이념, 예를 들면 근대화 같은 것들이 국민들을 골고루 잘살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따라서 세계화구상을 발표했을 때 비판적이고 소극적인 국민들이 많았습니다.

세계화에 대한 관심은 각 계층마다 관심이 다르겠지요. 무한경쟁시대인 만큼 경쟁에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되는 대기업이나 신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고학력자들은 은근히 기회의 확대에 대해 기대가 클 것이고 상대적으로 경쟁에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계층은 불안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세계화와 관련, 일부 계층만의 참여로는 통일된 세계중심국가형성이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전계층을 감싸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대가가 돌아가는 체제를 만들어 각 계층, 각 지역, 각 부분이 통합되도록 할 것입니다.

崔 江기자

외 무 부

OECD 가입 신청 연기
전체일정에 영향없어

'OECD 가입신청 연기' 제하의 보도 (1월15일자 조선일보)와 관련해 외무부의 입장과 정책배경을 밝힌다.

정부는 OECD 가입신청서 제출시기를 지난 1월로 검토한 바 있으나 국제외환시장 동향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3월 이후로 연기하기로 했다.

OECD 가입신청은 요식행위로서 그 제출을 3월이후에 하는 경우에도 전체 일정에는 영향이 없으며, 이러한 가입신청연기가 가입자체에 대한 입장변화를 뜻하지는 않는 것임을 다시 한번 밝힌다.

참고로 OECD 가입절차를 알린다. 작년 6월 각료급 이사회는 우리나라의 OECD가입과 관련해서 한국이 준비가 되는 시점에서 가입협의를 시작토록 사무국에 위임했다.

가입신청서가 제출되면 올 상반기중 168개 코드에 대한 우리입장을 정리한 메모렌덤을 OECD측에 제출하고 이를 기초로 올 하반기중에 협의를 진행하게 된다.

이 협의 결과로 96년 6월쯤으로 예정된 각료급 회의에 보고되고, 이 회의가 가입을 승인하게 되면 OECD와의 협의 절차는 끝나게 된다.

가입에 따른 국내절차로는 국회비준 동의가 필요하고 국회비준은 제반 일정에 비추어 96년안으로 모두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공보관실)

철 도 청

철도공작창 민간 매각 검토안해
경영합리화 작업은 추진중

철도공사화에 대비한 경영합리화 방안으로 서울, 대전, 부산의 3개 철도공작창을 민간기업에 매각할 것을 검토중이라는 보도(1월24일자 연합통신)에 대해 철도청입장을 밝힌다. 결론부터 말하면 사실과 다르다.

철도청이 현재 공사전환 작업을 진행하면서 경영합리화 시책으로 시설, 장비의 전산화, 자동화, 기계화로 93년부터 오는 97년까지 5천3백여명의 인원감축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철도청은 서울, 대전, 분당 등 3개철도 공작창을 철도차량 제작업체인 한진, 대우, 현대 등 민간기업에 매각한다는 방안에 대하여는 전혀 검토한 바가 없음을 밝힌다.

(공보관실)

국 방 부

對北 전투태세 의문 外信보도
유사시 대응 전투태세 완벽

美『월스트리트 저널(Wall Street Journal)』紙의 '美, 한국의 對北전투태세에 의문제기' 란 보도(1월17일자)에 대해 국방부의 입장을 밝힌다.

보도의 주내용은 첫째 한국정부가 당면한 북한위협은 외면하고 장기적으로 일본 위협에 주안을 두고 있고, 둘째 군의 사기 저조, 셋째 저조한 무기 수준, 넷째 무기구입 문제에 있어서 한미간 의견대립 등을 들었다.

이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은 북한을 최대 당면적으로 간주하고 전투준비태세와 전력정비에 최우선을 두고 있다.

잠수함·첩보기 등 해·공군 전력증강은 북한의 기습공격시 美軍의 전력전개 이전에 즉응하기 위한 필수적 핵심전력으로 對北작전 측면에서의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韓美연합사령관이 보완을 요청했던 전력이다.

지난해 10월 한미군사전략회의시 이와 관련된 팜플렛을 작성하여 美국방성에 배포, 韓美간 인식을 같이한 바 있다. 또한 94년 12월 이와 유사한 내용의 보도(94년 12월6일자 W.S.J紙 한국특파원 스티브 글레인 기자)가 있었을 때 국방부는 일본측에도 설명, 충분히 이해시킨 바가 있음을 밝힌다.

둘째, 한국군 사기 문제는 왜곡과장된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장병의 말을 인용, 한국군은 북한군의 공격시 아수라장이 될 것이며 지휘관에 대한 병사들의 존경심이 떨어지고 장교들은 병사들을 통제할 수 없다고 보도했는데 익명이건 아니건 그 누구도 스티브 글레인(Steve Glain) W.S.J紙 한국특파원으로부터 면담요청을 받은 바 없음이 자체조사결과 드러났다.

최근 군내부에서 일부 불미스러운 사고가 있었으나 현재 한국군의 전체 사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 완벽한 전투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셋째, 무기수준의 보도관련 실탄 및 장비부족으로 사격훈련시 개인당 3발의 실탄만 할당받고 방독면도 화학무기가 아닌 최루가스에 대한 방호용이라는 것. 그나마 양호한 방독면은 장교에게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혀 사실무근의 보도이다. 탄약 및 방독면 등은 유사시 지원에 문제가 없으며 상태 또한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끝으로 양국간 무기구입상의 이견문제이다. 韓美연합방위태세 향상에 주안을 두고 양국간 긴밀히 협조해나가고 있음을 다시한번 강조한다.

참고로 문제의 기사를 쓴 W.S.J紙 한국특파원인 스티브 글레인(Steve Glain)기자는 지난해 12월에도 이번 기사와 유사한 내용을 보도, 국방부에서는 항의와 더불어 사실해명을 한바 있다. 국방부는 W.S.J紙에 공식 항의서한을 발송할 예정이다.

(정책기획관실 대미정책과)

철 도 청

장애인 열차운임 할인 확대
재정상태 취약해 어렵다

'장애인의 열차이용에 부당한 대우를 하고 있다'는 신문보도(1월13일자 한겨레신문 독자투고)에 대해 철도청의 입장을 밝힌다.

투고내용을 보면 장애인은 정상인과 달리 오히려 고급열차를 이용해야 할 처지인데도 불구하고 운임할인 혜택을 통일호이하의 저급열차로 제한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지적하고 장애인에 대한 할인 혜택을 전열차에 확대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현재 철도청이 당면하고 있는 어려운 현실과 바람직한 대안을 설명드린다.

철도청의 운임할인제도에는 철도이용객 유치를 위해 실시하는 단체·정기권·정액권 등의 영업할인과 사회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장애인·노인·국가유공자·학생 등에 실시하는 공공할인이 있다. 이로 인한 공공부담액은 연간 2백60억원(94년기준)에 달해 경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다.

장애인에 대한 운임할인은 지난 90년 통일호이하급 열차에 50% 할인제도 시행후 93년 4월20일부터는 전철 전구간 100% 할인 확대를 실시했다. 94년 8월부터는 무궁화호 열차에 장애인 객차를 특별제작 운행하는 등 장애인의 교통편의를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그러나 철도청으로서는 재정상태가 취약한 상태에서 오는 96년의 공사화에 따라 경영을 합리화해야 할 중요한 시점에 있다. 인력절감, 기구축소 등 자구노력과 함께 각종 공공할인제도를 축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장애인 운임할인 확대문제는 자체수입에 의하여 운영되는 운송기관에 부담을 주기보다는 장애인 복지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에서 별도의 예산을 확보하여 교통운임을 장애인에게 지급하거나 할인금액에 대하여 철도청에 보전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다.

(여객과)

승용차「10부제」안내

공휴일·토요일 3시이후 제외

서울특별시

거리에 넘쳐나는 물결 2천6백만명(연인원)의 교통인구, 거기에 또 5백여대씩 늘어나는 자동차. 문자 그대로 서울의 거리는 지금 포화상태이다.

더구나 성수대교 붕괴 이후의 한강교량 등 도로시설물 개·보수 공사에다 제2기 지하철 건설까지 겹쳐 교통사정은 가히 '대란'의 지경에 이를 전망이다. 이런 사정을 조금이나마 완화할 목표로 서울시는 자동차 운행제한(10부제)과 함께 버스전용차선 확대를 시행하기로 했다.

■자동차 운행제한(승용차 10부제)

한강교량의 본격적인 보수기간인 95년 2월3일부터 5월30일까지(3월31일 제외) 서울시내 전 지역에서 승용차 10부제가 시행된다. 적용되는 차량은 서울시에 등록된 관용 및 승용차이며 다른 지역의 차량이라도 서울로 들어서면 바로 적용된다. 그러나 밤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토요일 오후 3시 이후 및 공휴일엔 10부제가 해제된다.

10부제를 이행하기 어려운 다음의 차량들은 제외된다. 첫째 외교용 자동차, 둘째 육안으로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보도용 자동차, 셋째 운전면허증 등에 장애인용 표시가 있거나 장애인 복지법령에 의해 발급된 장애인 표지 또는 자동차 운행제한 제외표지가 부착된 자동차, 장애인을 태우고 운행중인 자동차, 넷째 소방·경호·군작전·경비·의료 및 긴급 정비서비스 용임을 쉽게 구분할 수 있는 긴급자동차, 다섯째 임시 운행허가 기간중의 자동차 등이다. 이 가운데 장애인 수송차량은 시·군·구청장이 발급하는 제외차량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만약 해당일에 자동차를 몰고 거리에 나설 경우엔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하고 단속 적발 2시간후 다시 운행할 경우엔 과태료가 재부과된다.

■버스전용차선 확대시행 계획

95년 1월1일 현재 한강로 등 23개 구간에 대해 버스전용차선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2월3일부터는 영동대교와 1개구간(일방향)과 종로 등 11개 구간(양방향)에도 시행된다. 일방향 차선은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저녁 5시부터 9시까지 적용되며 양방향 차선은 아침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적용된다. 또 4월부터는 남대문로 등 11개 구간, 5월부터는 남부순환로 7개 구간을 확대해 시행할 예정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엔 7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李賢珠기자

종합청사게시판

전산자동입찰제 시행

국 방 부

국내 최초로 컴퓨터통신망을 이용한 전산자동입찰제도가 도입돼 2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지금까지는 해외에서 도입하는 군수물자의 대금지급을 위해 외화매입 때마다 국내은행의 외환담당자를 불러 입찰을 하는 불편이 있었다. 또한 절차가 복잡하고 환율이 수시로 바뀜으로써 입찰참여율이 저조한 문제점도 있어 그 개선책으로 전산자동입찰제도를 실시하게 된 것이다.

국방부 조달본부는 해외대금결제를 위해 지난 91년부터 국내은행을 통해 외화를 매입해왔다. 이로써 국내 각 은행에 설치되어있는 금융정보 컴퓨터통신망인 '인포맥스'를 이용, 컴퓨터단말기를 통해 응찰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입찰참여율이 높아지면 적지않은 예산절감이 예상되며 행정업무도 그만큼 간편해지게 된다.

영유아보육法 입법예고

보건복지부

맞벌이가정 아동을 돌보는 등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개정안이 입법예고되었다.

주된 내용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사업장을 상시 여성근로자 500인 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사업주가 보조해야 하는 보육시설 운영 및 수탁영유아 보육비용의 수준을 1백분의80 이상에서 1백분의50 이상으로 완화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안을 20일간의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확정되는 대로 곧바로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보육교사 양성교육과정의 훈련기간은 금년 7월1일부터 연장 시행할 예정으로 있다.

행정상담위원제도 20돌

총 무 처

지역주민의 행정불편을 해소해주고 정부시책을 주민들에게 이해시켜 행정신뢰를 증진시키는 등 정부와 주민간의 가교역할을 맡아 해오고 있는 행정상담위원제도가 올해로 실시 20주년을 맞는다.

행정상담위원은 시·군·구 기타 지역 단위로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30세이상인 사람 중에서 관할시장·군수·구청장 등의 추천을 받고 총무처장관이 위촉한 무보수 명예직.

총무처에선 올해, 행정상담위원중앙협의회를 구성하고 자체지역협의회 개최를 정례화하며 각급 행정기관의 주요시책에 행정상담위원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등 제도 활성화 방안을 마련, 시행할 계획이다.

건널목 차단기 교체

철 도 청

육로교통의 급속한 증가와 열차의 고속운행 등에 따라 빈발하는 건널목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건널목 일부만 차단하던 차단기를 건널목 폭 전체를 차단할 수 있는 장대형으로 바꾼다. 기존의 직립형 경보기도 식별이 용이하도록 공중에 매다는 형태의 현수형 경보기로, 경고등도 밝기가 선명한 발광형 LED(Light Emitting Diode)형으로 바뀐다.

또한 열차접근 때 통행인에게 경고하는 음성자동 안내장치를 개발, 홍도3건널목(호남선 대전-서대전간), 신탄진건널목(대창선 신탄진-정비창간) 등 2개소에 설치운용중이며 올해엔 서울-수색간 서소문건널목 등 43개소에, 내년엔 38개소에 차례로 설치할 계획이다.

지방행정메모

노후 상수도관 교체

인천광역시

시민들에게 맑은 물을 공급키 위해 오는 97년까지 낡은 상수도관 6백45㎞를 교체한다.

仁川시는 10년 이상된 상수도관을 스테인리스 등 부식되지 않는 관으로 교체할 계획이며 올해엔 남구 주안동 등에 매설된 노후관 2백15㎞를 교체하기로 했다.

해외시장 확충에 나서

경 상 북 도

慶北도는 도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등의 수출확대를 겨냥한 해외시장 확충을 위해 올해에 모두 6억9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31개국에 시장개척단을 파견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도내 농산물 1만2천달러어치의 수출을 목표로 시장개척단 파견, 박람회 및 전시회 참가, 구매촉진단 파견, 수출기술연수 등을 실시한다.

2월부터 11월까지는 6회에 걸쳐 東유럽, 東南亞, 南유럽, 일본, 중국, 중남미 등 16개국에 시장개척단 57명을 파견해 농산물 5천3백달러어치를 수출한다. 또 오는 5월부터는 일본, 중국, 호주 등 8개국에서 열리는 국제박람회에 도내 농산품을 출품해 4백3천달러어치를 판매할 계획이다. 또한 6월과 10월 美洲지역과 일본에 구매촉진단을 파견, 모두 2백40만달러어치를 수출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고교 교사·학생 일본 연수

전 라 남 도

全南도교육청은 올해 3억4천여만원을 들여 공업계와 농업계 교사와 학생 3백20명을 두 차례로 나눠 일본에 연수시킬 예정이다.

이번 연수는 교사의 자질과 학생들의 현장적응력을 향상시키고 첨단기자재의 조작술, 신기술의 습득, 선진 첨단농업시설 및 기자재 관리와 활용능력 습득, 그리고 농업교육 인구의 저변확대 및 영농정착 의지를 고양시키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실습분야는 기계, 금속, 자동차, 중장비, 전기·전자, 전자계산기와 첨단 유리온실, 컴퓨터농업, 수경재배, 조직분양, 시설원예, 농산가공, 축산 등으로 돼있다.

토지종합전산망 가동

개인별·가구별 땅매매 손금보듯 파악

내 무 부

내무부의 국토정보센터(地籍課)는 국내 최대용량의 정보관리시스템인 토지종합전산망을 완성, 지난 1일 시범가동에 들어가 3일 현판식을 갖고 정식 활동에 들어갔다. 전산망 완성은 金泳三대통령의 부동산실명제 의지를 본격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으로 땅값을 안정시켜 종래 고질적 韓國病으로 지적되어온 부동산 투기를 뿌리뽑아 경제를 안정시킨다는 '大意'를 담고 있다.

토지종합전산망은 내무부가 관리하는 주민등록전산망과 지적전산자료 및 건설교통부의 공시지가 전산자료를 연계, 통합한 것이다.

이 전산망의 강점은 세대주(개체)별로만 소유 토지를 파악할 수 있던 기존의 것에 비해 '아무개'라는 세대원 한 명만 입력해도 '아무개'의 부인·아들·딸 등 세대원 전체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토지를 한눈에 볼수 있도록 한 점이다. 이로써 개인별은 물론 가구별로 땅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언제 어디서 얼마만큼의 땅을 사고 팔았는지, 한가족이 갖고 있는 땅값은 모두 얼마나 되는지 등이 키보드 몇개만 두드리면 손금을 보듯 낱낱이 파악할 수 있다.

"토지소유에 대한 정당한 과세를 물게해 경제가 안정됨은 물론, 투기가 사라져 땅값이 안정됩니다. 이렇게 되면 토지거래의 질서가 확립되고 국민들은 내집마련이 한결 쉬워집니다." 柳炳燦 지적과장의 말이다.

물론 남의 이름을 빌려 이용한 명의신탁문제 등이 앞으로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지만 좀더 부동산 관련법제를 완비해나가면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자체 판단하고 있다.

앞으로 95년중으로 건설교통부에서 넘겨받은 건축물대장을 표준화하여 2000년이전까지 단계적으로 전산화해 토지와 건물거래, 보유정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명실공히 '부동산종합정보센터'로 발전시킬 방침이다.

전산망 구축과정에서 손과 발이 되어 뛰었던 楊圭英(내무부 지적과·6급)씨는 "워낙 방대한 양이고 계획에서 완성까지의 시간이 짧아 힘든 업무였지만 보람과 긍지를 느낀다"면서 차후 전산망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개발의 지속적 노력이 뒷받침돼야 그 효력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 개개인의 정보인만큼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정부가 의도하는 투기방지 등 공공목적 이외에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고 있고, 불법사용을 차단하기 위해 자동감시를 하는 등 엄격한 관리를 하고 있지요." 그는 또 실무자들의 정신무장으로 개인비리가 없도록 해야 하는 점도 중요한 업무중의 하나라고 강조했다. **李順姬기자**

이달의 독립운동가

東京 2·8선언 주도
崔 八鏞 선생

2·8독립선언 제76주년을 맞는 이번 2월의 독립운동가로 日帝의 중심부 東京에서 2·8독립운동을 전개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여 일본 유학생들의 우국충정과 민족의 자주독립의지를 세계만방에 알렸던 塘南 崔八鏞선생(1891~1922)이 선정되었다.

함경남도 홍원에서 태어난 塘南은 비교적 유복한 가정에서 성장하며 일찍이 漢學을 배웠다. 이후 개화사상의 영향을 받고 신학문을 배우고자 일본으로 가지만 庚戌국치의 비보를 접한 후 비분강개하여 귀국, 오성중학교를 졸업했다. 졸업후 다시 일본으로 건너가 재일유학생 단체인 조선유학생 학우회에 가입한 塘南은 1918년 4월13일, 기독교청년회관에서 개최된 웅변대회에서 조국광복의 열망을 강력히 피력했다.

또한 1919년 1월6일 동경 YMCA강당에서 조선유학생 학우회가 주최한 웅변대회에서 송계백, 김도연, 김상덕 등과 함께 독립운동의 대표위원으로 선출되어 독립선언문을 인쇄하는 등 독립운동의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급기야 1919년 2월8일에는 동경에서 2·8독립선언서에 서명, 공포하고 YMCA강당에서 개최된 2·8독립선언식에서 조선청년단을 발족시킨후 일경에게 체포되었다.

塘南은 동경 지방재판소에서 금고 9월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른 후 1920년 3월 출옥했으나 옥중여독으로 건강이 쇠약해져 정양을 위해 귀국, 고향에서 요양후 서울로 이사, 다시 긴밀히 독립운동을 추진하던중 1922년 9월 약관 32세의 나이로 서거했다. ■

통일원

비무장지대 통일거점지역으로 활용
평화적 이용 위한 조사·계획 박차

金 容 在 제2정책관실 과장

현재 비무장지대(DMZ)는 군사정전협정의 주요 내용을 이루고 있으며, 유엔군을 비롯한 우리나라측과 북한·중국사이의 휴전상태를 상징하는 표지물이라 할 수 있다.

이 비무장지대는 원래 적대적인 전쟁 당사자들간에 완충지대를 둠으로써 휴전을 보장하고 돌발적인 무력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정한 것이다.

그러나 공산권의 와해에 따른 화해·협력의 국제적 분위기가 높아지고 있는 최근에 와서는 비무장지대가 본래의 목적과는 별도로 통일을 앞당기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부각되고 있다.

비무장지대 및 접경지역은 앞으로 남북간의 접촉·교류가 활성화할 경우, 남북한이 하나되는 한민족공동체를 형성함에 있어 중요한 거점지역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인식하여 현재 통일원은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구상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현지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병행해오고 있다.

올해에는 비무장지대의 자연상태나 관리실태를 더욱 세밀히 조사한다는 관점에서 작년의 문산·철원 등 중부지역에 이어 화천, 양구, 간성 등지의 동부지역과 김포, 강화, 백령도 등 서해 도서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계획하고 있다.

이러한 실태조사를 통해 비무장지대 및 민통선 접경지역의 자연지리와 생태계 보존상태를 사실 그대로 확인함으로써, 향후 비무장지대 관련 정책추진 및 대책마련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접경지역이라는 이 지역의 특성상 방치되어온 각종 경제·사회적 시책이 소외된 감이 적지 않은데, 향후 전개될 통일의 기반조성 차원에서 이 지역주민들의 요구 등을 수용할 수 있는 법적 지원근거도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분단현장이자 통일교육의 場이 될 비무장지대 접경지역은 학생 및 청소년들을 위한 통일교육 프로그램 실행 및 현장견학 등을 위해 매우 유익하게 활용될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이러한 법적·제도적인 보완을 위하여 금년에는 우선 독일의 사례에 비추어 접경지역 개발과 관련한 법안의 필요성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비무장지대를 포함하는 민통선 이북지역, 접경지역은 출입이 통제된 결과 다른 지역에서 볼 수 없는 특별하게 보존된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는 곳이 많다.

이러한 결과 벌써부터 이 지역의 자연생태학적 중요성에 관심을 표명하는 각종 민원성 제의들이 잇따르고 있다.

국내 생태학자는 물론, 해외의 UN 기구인 UNEP(유엔환경계획), UNDP(유엔개발계획), 비정부간 기구인 IUCN(국제자연보존연맹) 기타 미국에서 활동중인 김계중 박사 등 주요 생태전문가들이 '비무장지대 자연공원화' 등을 제의하고 있다.

특히 앞으로 선진국이 중심이 되어 거세게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Green Round(GR:지구환경보존협약 등)에 대비하여 우리가 먼저 비무장지대에 대한 개발계획 등을 수립해두어야만 비무장지대에 대한 효과적인 개발·활용이 가능해질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비무장지대 개발사업 자체는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세계화에 대비한 주요과제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어느 의미에서 볼 때, 한반도의 평화와 평화통일을 위해 우리세대가 극복해야 할 정치적 과제를 안고 있는 것이 비무장지대이기도 하다.

또한 비무장지대를 세계평화를 상징할 수 있는 평화지역(Peace Zone)으로 만드는 일이야말로 분명코 분단을 통일로 이어가고 동북아 평화구조를 이루는 세계화의 과제이기도 하다.

이처럼 비무장지대의 자연생태계 현황은 지역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자연자원의 寶庫만으로 인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정치사회적·종합적 관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바로 이러한 점이 세계화의 맥락에서 검토해야 할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이들 전문가들이나 국제기구 관계자들이 비무장지대 실태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인데 향후에는 이러한 점을 보완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리라 본다. ■

세계화는 더이상 이론구상과 개념의 규정에 머물러선 안된다. 공무원과 국민들이 함께 뛰어야 할 실천의 명제이다. 세계화정책을 실제로 기안·집행하는 정부부서 일선과장들에게 자신들의 각오와 포부를 들어본다.

세계화실천현장

건설교통부

제3차 국토개발계획 수정·보완
지구촌 주요산업 중심지로 육성

蔡德錫 국토기획국 국토계획과장

국토개발에 있어서도 세계 각국의 개발전략과 동향은 미래의 우리 국토 모습에 커다란 영향을 끼친다. 중국의 대외 개방정책으로 서해안 지역에 새로운 국토개발축이 형성될 수 있는 여건이 강화되었으며, '고베' 대지진은 경쟁적인 위치에 있는 '부산항'의 경쟁력을 상승시켜 부산항 확장(가덕도) 개발의 전망을 한층 밝게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는 이미 '지구촌' 시대의 국경없는 무한경쟁시대에 살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발딛고 있는 국토는 아직까지 '지구촌' 시대의 국토로서는 여러가지로 미흡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우선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국토이용의 비효율을 들 수 있다. 전국토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전국 인구의 44.5%, 제조업체의 56%가 몰려 있어 교통난, 토지가격 상승, 환경오염 등 각종 경제·사회적인 문제가 이미 심각한 수준에 달해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을 타파하고 21세기 환태평양 경제권의 중심으로 발돋움하기 위하여는 적극적이고 대외 지향적인 국토개발의 세계화 전략의 추진이 필요하다. 정부는 이미 '신경제 5개년계획'에서 '지역균형개발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국토개발의 기본목표로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국토개발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수도권'은 국가발전을 선도하는 중심지역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기능 정비를 추진하고,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능은 지방에서 체계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지방의 대도시와 대규모 공업단지를 중심으로 전국 7개 광역권 개발사업에 착수하였다. 이들 전국 7개 광역권이 모두 독자적인 경제권과 생활권을 형성할 수 있도록 개발계획을 마련할 것이며, 앞으로 이들 지역을 '지구촌'의 주요 산업 및 교역중심지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각 광역권의 중심에 대규모 항만 또는 공항과 함께 대규모 공업단지를 건설할 것이며,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추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도 동시에 제공할 것이다.

건설교통부는 이와 같은 국토개발 전략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금년중에 국토개발에 관한 기본 청사진인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을 수정·보완할 계획이다. 앞으로 이 작업을 통해 우리나라가 21세기의 '지구촌' 중심지로 발돋움하기 위한 야심찬 국토개발의 비전을 국민앞에 제시할 것이다.

이는 국가의 미래와 발전에 관한 기본적인 과업으로서, 건설교통부뿐만 아니라 범정부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

부산광역시

釜山의 亜·太주역도시 부상 위해
경제위주 실리적 교류·협력 추진

李 龍 虎 기획관리실 국제협력담당관

오늘날처럼 자본, 상품, 인력, 정보 등이 국경을 초월하여 자유롭게 교환되는 무한경쟁의 시대에 있어서는 개발을 통한 경쟁에 의하지 않고서는 국제사회에서 살아남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UR을 계기로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다.

부산시는 일찍부터 세계화에 대해서 남다른 의지와 노력을 보이고 있는 지역이다.

즉 지난 94년1월13일 전국에서 처음으로 '부산국제도시화 선언'을 한 이래 그 목표를 '아시아 태평양의 고도다기능도시 건설'에 두고 범시민적 국제화 분위기 조성, 능동적인 국제교류 추진, 지역산업경제의 활성화 등 여러분야에 걸쳐 국제화 혹은 세계화에 온 힘을 기울여왔다.

이에 따라 우선 기본적인 여건조성 단계로 '외국인도 편리한 도시조성'을 위해 현재위치도, 관광안내도, 시설물 안내 표지판, 교통안내 등 각종 안내체계를 외국인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전면 정비해나가고 있으며 기타 여러분야에서도 세계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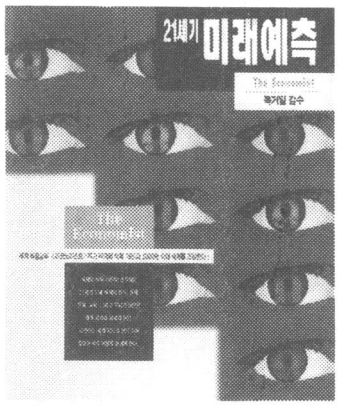
한편 국제교류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과거 도시간 교류가 일본, 중국 중심으로 편중되어 있던 것을 94년에는 인도네시아의 수라바야시와 호주의 빅토리아주 등과 새롭게 자매결연을 맺음으로써 동남아시아 및 오세아니아주까지 그 교류의 폭을 넓히고 있다.

우리 부산시는 정부의 '세계화 선언'과 발맞추어 국내외적인 여건을 부산발전의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고 명실공히 부산시가 '동남권의 중추도시', '동북아의 관문도시', '환태평양 거점도시'로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중 특히 국제교류의 추진에 있어서는 과거 단순방문이나 친선도모형식의 교류에서 탈피하여 경제위주의 실리적인 교류와 협력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95년 1월중순에는 시장이 직접 지역경제인들과 함께 NAFTA권의 핵심도시인 멕시코의 티후아나(Tijuana)市를 방문,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상호협력방안을 논의함으로써 중남미지역에 지역기업의 진출거점을 마련한 바 있다.

아울러 95년중으로 동남아지역의 신흥개발도시로서 부상되고 있는 베트남의 호치민市 및 유럽의 항구도시와도 적극적인 교류와 협력방안을 강구함으로써 부산시가 아시아태평양시대의 주역도시로서 그 위치를 확고히 정립하기 위해 적극적인 도시간 외교를 전개할 계획이다. ■



「이코노미스트」지 編著 「21세기 미래예측」

2000년대의 승자는 韓國

金 東 善 통상산업부 세계무역기구담당관실 사무관

150년전 경제학자이며 기업가였던 제임스 윌슨에 의해 창간된 「이코노미스트」지는 「21세기 미래예측」이라는 책을 출판했는데, 앞으로 150년 이후 21세기 초반의 세계 정치·경제·사회·교육 등 광범위한 분야에 대한 전세계 전문가들의 예측을 모아 놓았다.

이 책은 그동안 「이코노미스트」지가 창간이래 고수하여왔던 자유주의 신념을 기초로 시사적이고 다양한 소재를 광범위하게 취급함으로써 다양한 독자층을 겨냥하고 있고 특히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현재상황에 기초하여 최근 특질 중 지속적으로 미래에 영향을 미칠 사항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기존의 미래예측서와는 다른 현실감있는 느낌을 주고 있다.

「이코노미스트」 부편집인인 브라이언 비덤은 '더 나은 투표방식'이란 글에서 공산주의의 종말에 따라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대의민주제에서 직접민주제로의 이행을 전망하였고, 그 이유로 이데올로기의 대립이 제거되고 투표자들의 지적성숙도가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페루의 기업가이자 경제학자인 에르난도 데 소토는 '빠진 성분'을 통하여 향후 시장경제체제에서 발전할 국가는 재산권을 법적으로 보호하도록 에너지를 쏟는 나라라고 말하고 재산의 공식화가 개발도상국의 최우선 과제라고 했다.

싱가폴의 이광요 전수상, 크리스토퍼 패튼 홍콩 총독, 헨리 루이스 게이츠 교수 등은 세계 각지역의 미래전망을 제시하였다.

日本 최고수준 생활 지속

NAFTA는 APEC에 문호를 개방함으로써 2008년에 아세안과 한국·대만·호주·뉴질랜드의 추가가입과 2015년에 일본과 중국의 가입을 전망하였고, 일본은 노령화로 인한 성장의 둔화, 저축감소에도 불구하고 전후세대 지도자들의 중국·한국·아세안에 대한 도덕적 부채를 청산하고 21세기 초반에도 가장 높은 수준의 생활을 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러한 근거로 과거 1858년의 메이지 유신과 1945년 전후의 평화주의 정착노력 등 위기 때마다 성공적으로 방향을 전환시키고 민첩하게 대응하였던 전례를 들었다.

유럽의 경우는 문화적 유대감과 다원적 사회의 다양하고 변화하는 욕구들을 조화시키는 정치창조력으로 인하여 여전히 계속적인 '부'를 누릴 것이나, 앞으로 수십년동안 유럽은 최대의 지역문제인 사회주의 체제의 전환문제와 씨름할 것이라고 보았다.

아프리카의 경우 보다 작은 국가의 독립을 통한 민족자결의 강화 움직임과 함께 거대한 정치공동체와 경제연합을 지향하는 지역통합 움직임이 강화될 것으로 보았다.

예를 들면 레소토·스와질랜드·보츠와나·나미비아 등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주도권을 장악하고, 케냐·우간다·탄자니아의 동아프리카 공동체도 활성화될 것으로 보았고, 프랑스가 동구문제에 개입하면서 니제트·베넹·카메룬 등의 서아프리카의 헤게모니는 나이지리아가 차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광요 전수상이나 프레드 벅스틴은 21세기의 승자들이 될 가능성이 큰 지역 가운데 하나로 한국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시아를 거론하고 한국의 중심과제인 통일문제에 대하여도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하였다.

인류장래 유색인이 좌우

특히 한반도의 경우, 북한이 남한의 관리를 받게되나 독일의 경우와는 상황이 다르며 1:1의 동화 교환이나 통행의 자유 등에 장기간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았다.

미국의 교육가인 다이앤 래비취는 '학교가 당신을 찾아올 때'를 통하여 교육의 목표는 변화하지 않으나 전자기술의 발달 등으로 학습자와 비학습자간의 불평등을 심화시키게 될 것으로 보았다.

하바드대 교수인 헨리 루이스 게이츠는 '피와 반어'에서 국가적 응집력은 인종적 동질성을 보존해야 한다는 주장은 역사적 근거가 없고 인종의 뒤섞임은 오히려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었으며, 인류의 미래는 유색인에 의하여 만들어질 것이라고 했다.

옥스포드대학 교수 앤소니 스미스는 다음 세대에서 남는 시간의 처리가 삶의 중심적 문제로 되고, 오락의 중요성은 점차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경쟁과 협력의 새로운 질서의 시대인 21세기를 살아가야 할 우리들에게 지금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일관성있는 미래의 이미지 구축이며 그러한 점에서 세계화와 지방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우리에게 이책은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넥서스刊 · 1994년版)

내가읽은책

박경욱 著 「PR · PR-새로운 커뮤니케이션 전략」

나쁜 뉴스일수록 빨리 발표하라

吳 濟 世 국무총리 비서실 국장

세계화·정보화·지방화의 시대와 더불어 신문의 숫적·양적증가, 방송채널의 다양화 등 언론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는 요즈음 PR의 중요성도 날로 커지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PR에 관한 기초이론과 실무측면에서의 입문서로서 적절하다고 하겠다.

PR의 개념은 한마디로 '정부와 국민간의 쌍방적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상호간의 거리를 좁히는 것'이다.

요즘과 같이 사회가 급변하고 전문화 되어가는 시대에는 서로를 모르는데서 오해와 충돌, 불신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더욱이 과거의 행정패턴은 일방적인 정책결정이나 행정정보의 비공개가 많이 있어왔으므로 PR이 제기능을 다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정부입장은 정직한 정책수립과 행정정보 공개, 투명한 행정을 기본으로 삼고 있으므로 PR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풍토가 조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PR의 변천과정을 보면 기업의 비밀주의→이에 대한 언론의 공격→PR회사의 등장→방어적 홍보→발상의 전환→정보의 적극적 제공순으로 발전해왔다. 예컨데 미국의 대사업가 록펠러의 경우 처음에는 홍보부족에 의해 '악의 화신'으로 불려지다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가장 존경받는 '위대한 미국인'으로 변모하게 된 것이 곧 PR의 역할이다.

PR전략은 여론 설득 방법과 위기관리·이미지관리 PR방법 등이 있다. PR은 궁극적으로 여론설득을 목표로 삼는다. 지지하는 여론을 더욱 강화시키고 어긋나는 여론을 바꾸고, 없는 여론을 만들어 내기 위해 PR기술을 사용하는 것이다.

위기대처능력이 진짜 실력

우선 여론지도자를 PR대상으로 하되, 효과적인 설득기술을 발휘함에 있어서 불변의 법칙은 '욕구를 잡는 것'에 있다. 욕구가 사람을 움직이기 때문이다. 설득할 사람이 누구인지를 분명히하고 한가지 아이디어를 제시하되 뚜렷한 주장과 분명한 결론을 내야하며 권위있는 메시지가 설득효과가 높다.

또 우리는 위기다발시대에 살고 있으며 위기 대처능력이 진짜 실력이듯이 위기에 처한 조직의 대응은 그 조직의 진짜 실력을 판가름한다.

조직이 위기에 빠지면 언론의 주목을 받아 대중에게 전달되므로 이때의 행동은 그 조직의 모든 것처럼 비쳐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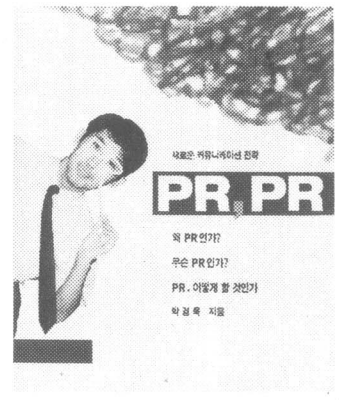
대중의 눈에 비친 조직의 사태해결 능력과 의지는 조직에 대한 평가로 직결되는 것이다.

성공한 위기관리 사례로는 美國 존슨&존슨社의 경우를 들 수 있는데, 그 전략을 보면 ▲사실의 신속한 공개 ▲최악의 사태상정, 광고 전면중단, 전제품 수거 ▲신속한 결정, 사태진상 추적 ▲여론조사 등 광범한 정보수집 ▲직원들에 대한 인간적 배려 ▲위기의 원인에 대해 단호하고 공격적인 방식의 대응 ▲모든 관계자들과의 커뮤니케이션 등을 통해 실제적으로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조치를 취했다.

언론집단이 PR성패 좌우

한편 좋은 이미지는 물건을 잘 팔아주는 것 이상으로 기업의 생존과 절대적인 함수관계에 있다. 좋은 이미지는 기업이 어떤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저질렀을 때 피해를 줄여주는 보험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바람직한 이미지는 전문적인 이미지, 신뢰받는 이미지, 친근한 이미지, 강한 이미지로서 이러한 이미지를 만들어 내는 PR방법으로는 빅아이디어를 찾아 장기적인 캠페인을 실시하고 일관성을 유지해야 하며, 행동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PR기술에 있어서는 언론관계 기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현대에 있어 가장 영향력이 큰 집단이 언론이며 언론관계자가 PR의 성패를 좌우하기 때문이다.



성공하는 언론관계를 위해서는 뉴스창구를 단일화하고 좋은 뉴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나쁜 뉴스일수록 빨리 발표한다. 기자를 대하는데 있어서는 정직한 뉴스,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하되 언론의 매카니즘을 무시하거나 기사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삼간다. 또한 자기과시, 정책적 술수, 악의적 고발, 내부고발 등 정보유출을 삼간다.

최근에 정부의 공보기능이 민간기업 못지않게 크게 발전하고는 있지만 아직도 공공부문의 PR에 대한 인식과 전문지식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된다.

효과적인 정부PR을 위해 민간기업의 PR전략이나 기술을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도서출판 인간사랑刊 · 1994년版)

정부간행물

동학 등 日帝때 종교운동 분석

한국독립운동사 연구 - 제8집

동학1백주년을 맞아 '동학농민전쟁과 의병전쟁의 민족주의적 성격'이라는 주제의 글이 실린 논문집이 발간되었다.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는 지난 87년 이래 매년 발간해오는 이 연간 학술지에서 한국독립운동사와 한국 근현대사를 새로이 조명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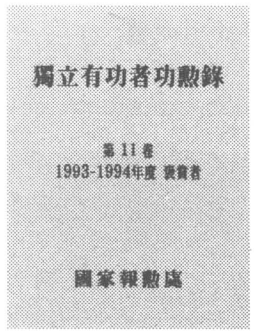
이번 8집에는 동학을 주제로 한 4편의 논문 외에도 일본 불교의 종교적 침략상을 다룬 논문과 이에 저항하여 한국 불교의 전통을 되찾고자 했던 종교운동에 관한 논문들이 실려있다. 그리고 하와이, 중국관내, 만주 등지에서 활약한 국외 한인들의 독립운동을 다룬 논문과 3·1운동, 6·10만세운동과 관련된 독립운동 등 다양한 논문들이 수록되었다.

또한 광복50주년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학술심포지엄의 주제인 '한국독립운동의 시기별 특성'의 내용을 정리해놓고 있다.

〈**독립기념관 刊** · 4 · 6배판 · 485쪽 · 문의 (0417)60-0401 · 비매품〉

애국지사 4백12명 공적

독립유공자공훈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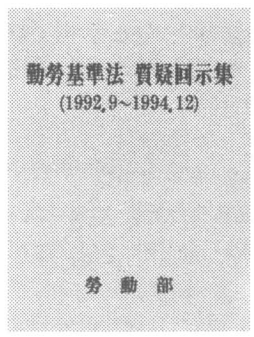
정부포상을 받은 독립유공자들의 공훈을 기린 책으로 11번째 발간집.

이 공훈론은 日帝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14일까지 국내외에서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아 1993~1994년도에 정부로부터 포상을 받은 순국선열과 애국지사 4백12명의 공적을 가나다 순으로 실었다. 부록으로 1919년 하와이의 '대조선독립단'에서 제작 보급한 '한국 소요의 진상과 독립선언서'의 원문과 번역문, 그리고 신규 포상자의 인명록도 수록했다.

〈**국가보훈처 刊** · 4 · 6배판 · 454쪽 · 비매품〉

勞使 쟁점사례 노동부 해석

근로기준법 질의回示集



92년 9월부터 94년 12월까지의 근로기준법 운용과 관련한 주요행정 해석 1백93편을 정리, 수록한 질의回示集.

산업사회가 발전하면서 각 사업현장의 실정에 따른 근로관계, 높아진 勞使권리의식 등으로 노동법의 적용 및 해석에 다양한 차이가 발생, 노사간의 다툼도 빈번해졌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근로기준법에 대한 정확한 법리를 정립하고 올바른 해석관행의 정착과 이해의 확산을 도모키 위해 발간했다.

'직급 정년제의 정당성 여부', '사업의 양도 양수시 퇴직금 제도를 각기 달리 할 수 있는지 여부', '임금채권 우선변제에 있어 사용자의 총재산의 범위' 등 최근 노사간에 쟁점사항이 되고 있는 사례에 대한 노동부의 회시내용을 담았다.

〈**노동부 刊** · 4 · 5배판 · 276쪽 · 문의 500-5566~8 · 비매품〉

관광전문인력의 양성방안 모색

개방화·세계화시대의 관광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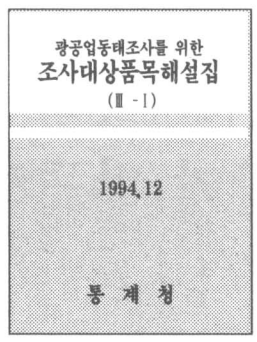
개방화·세계화의 시대를 맞아 날로 중요성을 더해가는 觀光전문인력의 효율적인 양성방안을 선진외국과 비교하여 모색한 보고서.

전문인력의 양성방안으로 정규 학교교육, 공공교육, 사설학원교육, 사업체 사내교육 등 관광교육을 수행하는 모든 부분의 기능을 전문적으로 차별화해 교육의 효율을 높이는 한편, 국가차원의 중장기 관광인력계획을 수립, 인력수급을 원활히 조정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또 관광분야가 직업을 구성하는 과업·기술·지식·태도와 최소한의 능력수준 및 이를 측정할 수 있는 측정방법을 제시한 국가직업자격기준을 제정, 관광사업의 직업적 전문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한국관광공사 刊** · 4 · 6배판 · 383쪽 · 문의 7299-324 · 비매품〉

통계 대상 6백78개 생산품 해설

광공업動態 조사를 위한 조사대상품목 해설집



우리나라 광공업사업체에서 생산하는 전체품목 중 생산비중이 5천분의1 이상이 되어 매월별로 실시하고 있는 광공업통계조사(광공업동태조사)의 조사대상품목으로 선정된 6백78개 품목에 대한 해설서.

이 책자에선 광공업 동태조사의 질적 개선을 위해 조사대상 6백78개 품목에 대한 품목별 조사단위, 특성, 종류, 용도, 원재료, 제조공정, 조사대상범위, 주요 제조업체, 제품사진 등을 수록했다.

〈**통계청 刊** · 4 · 6배판 · 전3권 · 1,323쪽 · 문의 222-1893~6 · 비매품〉

해방전후 7개 종교현황

北韓지역 종교자료집

해방전후의 北韓종교자료를 집대성하여 북한지역 종교의 어제와 오늘을 총정리한 자료집.

불교·유교·천주교·기독교·천도교·원불교·대종교 등 7개 종교의 해방전후 教勢를 살필 수 있는 사찰, 교회, 향교 등의 종교시설물과 성직자·신도수, 종교단체에서 운영한 의료기관, 교육기관, 사회복지시설 등을 종교별 특성에 따라 기술하고 있다.

전체 5부로 구성되었으며 해방을 전후한 시기의 北韓종교변천사, 종교실태, 종교현황, 종교정책 등을 수록하고 마지막엔 종교시설, 선교, 포교 등의 참고자료들을 수록했다.

〈**문화체육부 刊** · 4 · 6배판 · 546쪽 · 문의 720-9672 · 비매품〉

중소기업의 경영혁신 진맥

經營혁신과 중소기업의 事例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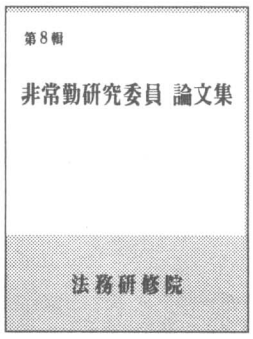
자본, 기술, 인력 등이 모두 대기업에 뒤짐에도 불구하고 그들만큼의 경영성과를 얻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사례를 통해 중소기업의 경영혁신을 진맥한 보고서.

이 책에선 우리나라 경영의 位相과 전망, 우리나라 기업의 경영혁신, 중소기업의 경영혁신사례, 경영혁신을 위한 과제순으로 살펴보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 刊** · 신국판 · 101쪽 · 문의 561-1400 · 3천원〉

외국인근로자 문제 등 해결방안

非常勤연구위원 論文集



법무연수원에서 저명한 대학교수들을 위촉하여 국내외적 당면과제에 대해 연구한 결과를 수록한 여덟번째 논문집.

이번 8집에선 주요 현안문제에 관한 올바른 형사사법적 해결방안에 도움을 주기 위해 외국인근로자들의 국내취업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노동관계상의 여러 문제를 검토한 '외국인 근로자와 노동관계법의 적용, 현행 환경 관계법령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제시한 '환경보호를 위한 효율적인 법적 대응방안 연구' 및 환경의 무역규제 수단화 추세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한 '국제환경질서의 변화와 한국의 과제' 등을 수록했다.

〈**법무연수원 刊** · 신국판 · 278쪽 · 문의 0331)281-3140 · 비매품〉

합리적인 상품 선택의 근거 제시

어느 회사 제품이 가장 좋은가(1995년판)

금년 한해동안 생산된 상품을 시험·검사하여 그 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 서술한 상품정보지.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개원이래 해마다 발간해오는 것으로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상품선택을 돕기 위해 객관적인 정보들을 실었다.

1995년판에는 첨단 기능을 갖춘 전기스탠드·전기보온밥솥을 비롯해 최근 수입이 급증하고 있는 中國産완구·방향제, 그리고 어린아기들을 위한 유모차·보행기 등 우리생활과 밀접한 상품 들의 시험결과를 자세하게 수록했다.

〈**한국소비자보호원 刊** · 4 · 6배판 · 123쪽 · 4천원〉

〈**정부간행물판매센터**〉 **서울**(02) 교보문고 730-7891, 종로서적 732-2331, 대한통계협회 725-4344, 한국경제서적센터 737-7498, 을지서적 757-8991, 프레스센터 정부간행물판매센터 734-6818, 태평서적 777-7551, 도서출판 진한도서 319-3535, 동화서적 555-7312, 서울문고 553-3038, 매거진월드 785-6136, 한국통계서적센터 712-9301 / **부산**(051) 영광도서 816-9500, 부산도서 517-1011, 문창서적 241-2411 / **대구**(053) 학원서림 425-0050 / **인천**(032) 대한서림 762-7337, 시민서림 864-5577, 부평문고 529-0077, 한겨레문고 515-2600 / **광주**(062) 나라서적 222-2828 / **대전**(042) 경제자료안내실 580-4414, 대훈문고 254-7007, 문경서적 253-8131, 대전서적 253-5019 / **경기** 경제자료안내실 (02)502-2312 교학사 (0331)251-3929, 동아서적 (0331)255-6436, 성진문고 (0331)32-9950, 경기서적 (0331)255-7500 경인문고 (032)654-1677, 회문서적 (0344)966-1102, 원당서점 (0344)966-4545 / **강원** 청구서적 (0361)57-3300, 교학사 (0361)54-4133, 투비서점 (0371)43-0345, 강릉서점 (0391)648-3178 / **충북** 청주서점 (0431)221-5724 문학사 (0441)847-2819 / **충남** 양지문고 (0417)556-6001, 문광사 (0416)55-2605, 종로서적 (0452)935-1313 / **전북** 홍지서림 (0652)88-5311, 대한서림 (0653)52-7700, 원서점 (0653)54-2785, 동지사서점 (0653)855-2717, 중앙서점 (0681)535-2784, 진서점 (0671)625-4988, 동화서점 (0673)42-5149 / **전남** 한림서림 (0631)44-5703, 일광서점 (0661)52-4414 / **경북** 학원사 (0562)47-3585, 학원서점 (0546)456-6222, 스쿨서점 (0571)57-9110 / **경남** 학문당 (0551)46-2925, 학원사 (0551)46-4510, 고려서적 (0591)42-4601, 진주문고 (0591)43-8321, 대일서점 (0591)759-9595, 상록서점 (0591)53-5954, 보승기술서적 (0591)745-9837, 서점글밭 (0558)656-3212, 큰바위서점 (0597)62-3594 / **제주**(064) 학생서림 57-0727, 중앙서적 62-8770